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 연구

서해정 · 박정연 · 채성현 · 전근배 · 이상준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서해정(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전환지원팀장)

공동연구원 : 박정연(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조교수)

채성현(충현복지관 보호작업장 원장)

전근배((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자립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상준(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연구원)

발간사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에서의 주택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의 전부였고, 지역사회 내 가정과 같은 형태의 주거는 그리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이 주거를 기반으로 한 24시간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해야만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서는 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분리하고, 낮 동안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과 사회서비스가 결합하여 지원되는 총체적인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 기존의 집단거주시설 형태의 주거형태가 아닌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행사되고 보장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과 가장 다른 지점은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에 포용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조사와 현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주거지원서비스 영역과 기준이 엄격할수록 장애인의 사생활 침해나 보호관리 영역이 많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주거지원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적절한 서비스 영역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실질적인 삶의 통제권한을 지닌 개인별 주택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적인 주거에서 생활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견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 목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절차	4
1)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문헌검토	4
2)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기반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4
3) 현장방문 및 개별과 집단 인터뷰 실시	4
4) 전국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	5
3. 연구 수행 체계	6
II.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	7
1. 주거지원의 개념과 범위	7
1) 주거의 개념	7
2) 주거지원의 개념	9
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설정	12
2. 주거지원의 목적	14
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별 기준	15
1) 주거안정성 영역	15
2) 주거편의성 영역	25
4. 시사점	45
III. 설문지 개발 과정	49
1.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49
1)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9
2) 노숙인 지원주택	51
3)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54



2. 유사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검토	56
1) 대구 A 자립생활센터 주거지원서비스 내용분석 및 자립생활주택 ILP	56
2) 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거지원서비스 내용분석	61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업무 형태 업무분석	63
3.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위한 FGI	65
1) FGI 실시 개요	65
2) FGI 분석 결과	65
4. 소결	68
IV.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69
1.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개요	69
1)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대상자	69
2)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문항	69
2.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결과	70
1) 현재 주거지원서비스 현장에서의 어려움	70
2)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지향	74
3)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	76
4)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3번)	78
5)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및 이용 절차	79
6) 주거지원서비스 인력(배치기준, 질, 자격 등)	80
7) 기존 인프라의 활용방안	82
8) 주거지원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기타	84
3. 시사점	85
V. 실태조사	91
1. 조사개요	91
2. 조사대상 및 방법	91
3. 조사내용	91
4. 분석결과	93
1) 종사자 현황	93
2) 주거지원서비스에 관련한 인식	94

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	97
VI. 결론 및 제언	101
참고문헌	119
부록 1.FGI 질문지	125
부록 2. 설문지	139



표목차

〈표 II-1〉 주거의 개념	8
〈표 II-2〉 주거안정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의 종류	21
〈표 II-3〉 장애종류의 체계적 분류표	26
〈표 II-4〉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27
〈표 II-5〉 자립생활 체험홈에서의 주거편의 관련 지원서비스	28
〈표 II-6〉 근육장애인의 주거생활을 위한 프로토타입 모델	30
〈표 II-7〉 케어안심주택 서비스의 예시	32
〈표 II-8〉 장애인 주거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구성요소	34
〈표 II-9〉 신체 기능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요소	36
〈표 II-10〉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별 지원내용	39
〈표 II-11〉 정신질환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예시	41
〈표 II-12〉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43
〈표 II-13〉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5
〈표 III-1〉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결과	49
〈표 III-2〉 노숙인 지원주택 현장방문 결과	52
〈표 III-3〉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결과	54
〈표 III-4〉 대구 A 자립생활센터 전체 업무분석 결과	56
〈표 III-5〉 A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 ILP 항목	57
〈표 III-6〉 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업무분석	61
〈표 III-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업무	64
〈표 III-8〉 FGI 참가자 정보	65
〈표 III-9〉 FGI 분석 결과	66
〈표 IV-1〉 주거지원서비스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질문 내용	69
〈표 IV-2〉 주거지원 서비스 현장에서의 어려움	72
〈표 IV-3〉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지향	75
〈표 IV-4〉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	77
〈표 IV-5〉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	78

〈표 IV-6〉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및 이용 절차	79
〈표 IV-7〉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81
〈표 IV-8〉 기존 인프라의 활용방안	83
〈표 IV-9〉 주거지원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기타	84
〈표 IV-10〉 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안)	87
〈표 V-1〉 주요 조사 내용	92
〈표 V-2〉 근무 지역	93
〈표 V-3〉 근무 지역	94
〈표 V-4〉 주거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인식	95
〈표 V-5〉 주거지원서비스 기준의 적절성	97
〈표 VI-1〉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 개요	102



▶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	6
[그림 Ⅱ-1] 장애인복지의 연령대 및 욕구의 특징	12
[그림 Ⅱ-2]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13
[그림 V-1] 주거지원서비스 인식 결과 평균	96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다른 지역주민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차인의 독립을 돕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임.
-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반(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협의의 주거지원서비스는 협의의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른 독특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국토부에서의 주택공급에 치중된 주거서비스와 서울시의 지원주택에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거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정하고, 이러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이를 위해 첫째, 이에 대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둘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을 검토하고, 셋째, 현장전문가 등의 통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의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절차, 인력 기준 등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문헌검토
 -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



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국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등의 현황을 검토.

-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기반 주택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전국에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에서 재가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그룹홈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의 일반적인 현황과 입주 및 퇴거 절차, 지원서비스 내용, 운영 인력 등의 현황 확인.
- 현장방문 및 개별/집단 인터뷰
 - 지역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개별면접 및 집단 집단인터뷰와 서면 의견조사 등을 실시.
- 전국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 설문조사
 - 본 연구에서 현장에서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원칙, 기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충청복지관에서 실시한 “성인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크리스트 연구(오단이 외, 2021)”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함.
 - 이후 전국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II.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

1. 주거지원의 개념과 범위

- 주거의 개념
 - 주거는 인간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주택 내부특성)이라는 의미와 이 같은 주택이 위치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또는 환경(주택외부특성)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
- 주거지원의 개념

- 주거복지란 인간의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진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 주거지원이란 주거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임. 주거지원의 목적은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것.
-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설정
 -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은 주거의 물리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 모두를 고려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형태의 주거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동의 문제(Mobility Problems)나 고용, 자립, 사회참여,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8)등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는 포괄적인 형태로 정의될 필요가 있음.

2. 주거지원의 목적

- 주거지원의 대상이 장애인으로 설정되는 경우, 장애인은 장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주거지원의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장애는 특정 생애주기상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이들의 욕구는 장애라는 특성과 결합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는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거지원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즉, 주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한 지원 방식인 주거안정성 영역과 주거의 사회적 특성을 강조한 주거편의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필요한 혹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함.



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별 현황

○ 주거안정성 영역

- 국내

구분	종류	내용
주택공급 관련정책	공공분양주택 장애인대상 특별공급	건설 량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이 추천하는 가 구(장애인 포함)에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장애인대상 주택공급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주택 및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구분
	영구임대주택	장애인의 경우 우선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으 나, 일반 공급 1순위 대상에 해당
	공공임대주택	장애인은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장애인은 우선공급대상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의 경우 2 순위에 해당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의 경우 2순 위에 해당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장애인 등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 관련정책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주택 건설시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편의시 설이 구비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한 주택
	주거급여(임차급여)	장애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만족하면 임 차급여를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임차주택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시 최장 2년간 매월 30만원의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은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주택개조 지원정책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장애인가구의 경우 연 0.2%의 금리 우대 적용
	수선유지급여*	장애인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
	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시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국외

구분	종류
미국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비노인 장애인 바우처 프로그램
	주택도시개발부 제811조 프로그램
	주택도시개발부 제202조 프로그램
	보훈 장애인 주거지원
	농림부 제515조
영국	주택공급정책: 주택공급의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
	사회주택 및 저렴한주택의 개혁
	주거지원의 질적 향상

○ 주거편의성 영역

- 최근 자립생활 운동이나 탈시설 운동의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체협힘이나 지원주택, 케어안심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거편의성의 영역에 관련된 국내·외의 지원서비스들은 주택 내부에서의 일상 활동에서부터 주택 외부영역의 사회참여 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지원영역들을 포괄하고 있음.
- 주거편의의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들 대다수는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어오던 서비스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지 않은 혼란을 예상해볼 수 있음.



Ⅲ. 설문지 개발 과정

1.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강동구에 위치한 □ 장애인 지원주택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
- 노숙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 노숙인 지원주택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
-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과 노숙인 이외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
- 주거취약계층별 필요한 지원에 따라 특성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주거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서비스들도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3개 기관 모두 ‘주택수리 및 관리’와 같은 분야를 어려워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 등의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음.
-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활동 혹은 낯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나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 기타 주거지원 유사 서비스 내용 검토

- 기타 주거지원 유사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구 A 자립생활센터 업무분석 및 자립생활주택 ILP, 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업무분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업무형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 목록은 기존 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형식과 동일하였으나, 일부 ‘지역사회 내 생활 및 연계’, ‘자립생활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같은 기능이 강화됨.

2. 설문지 제작을 위한 FGI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들을 구분하여 총 3개 종류의 기관(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지원주택)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
-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간보호시설이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함께 운영되어야 함.
- 체험주택이나 비공급형 주거지원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IV.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1. 조사개요

-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대상자는 현재 '주거지원서비스'로 지칭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운영기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현장 전문가 등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 14명을 선정하여 실시
-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 주거지원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차이점, 거주시설서비스와의 차이점
 -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현장에서의 어려움
 -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
 - 서비스 영역: 주거지원 서비스의 제공 영역
 - 대상자 및 절차: 서비스의 이용자(대상자), 서비스 신청 과정 및 절차
 -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조건), 인력의 배치기준
 -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 기존 시설의 용도전환,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원서비스 인프라와의 관계



2.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결과

- 현재 주거지원서비스 현장에서의 어려움
 - 주거 환경과 서비스 환경, 지원기관 운영 및 기타(인식) 분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지향
 - 개념의 정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차이, 거주시설과의 차이와 같은 의견이 나타남.
-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
 - 제시된 주거지원서비스 원칙의 안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특히,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한다는 점, 이용자 욕구와 자기결정의 강조,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것,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추가적인 제한(단주, 단약,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함.
-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
 - 참여자들은 제시된 주거지원서비스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었음.
-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및 이용절차
 - 참여자들은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자 범위를 모든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시설 퇴소 및 시설 입소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
-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 참여자들은 대부분 배치 기준이 1인의 코디네이터가 2~4명 정도의 장애인 입주민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하는 편이며, 일정하게 코디네이터 숫자에 따라 별도의 슈퍼바이저 및 실무 총괄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기존 인프라의 활용방안
 -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기존 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하거나 염려하였음.
- 주거지원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기타
 - 주거지원서비스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성적 평가체계와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이 필요하며,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표준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V.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현장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 조사대상 및 방법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부설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센터, 서울시그롭홈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의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LH의 주거복지지원센터 등의 협조로 전국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수행기관 종사자 모집 공고문을 기관 또는 협회 이메일로 보내 연구 참여 홍보를 요청
- 주거지원 관련 기관 또는 협회에서 공지한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탈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조사내용

- 설문지는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주거지원서비스 영역에 대해 물어보았음
- 설문지는 조사자의 일반적인 현황,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현 기관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음

4. 분석결과

- 종사자 현황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현장 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56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2명이 연구에 동의하지 않아 설문을 종료하였음.
-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4명 중 11명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경력이 6개월 미만이라 설문을 종료하였음.
- 가장 많은 응답자는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그룹(37.7%)이었으며, '2년 이상 5년 미만'그룹(35.5%), '5년 이상' 근무한 장기종사자(29.9%) 순이었음.
- 17개의 관할지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곳은 서울 84명(58.74%)이며,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순이었음

○ 주거지원서비스 인식

- 주거지원서비스의 철학, 개념, 지향에 대한 인식(1~3번 문항),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과 기본 대상자에 대한 인식(4~6번 문항),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주택 중심)에 대한 인식(7~9번 문항), 주거지원서비스를 위한 공적 체계의 역할에 대한 인식(10~12번 문항), 기타 기능전환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13~15번 문항)에 대해 문의하였음.
-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에 체크 하였으나, 3번 문항인 '주거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전혀 다른 배타적 서비스이다.(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7번 문항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주택 이용에 대한 권한(예: 입소 및 퇴소 조치의 권한)을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13번 문항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역할 할 수 있다.'에서는 다른 문항과는 달리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음

○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 총 8개의 영역과 그에 따른 하위영역들에 대한 적절성을 물어보았음. '1. 입주 전 안내 및 연계'(서비스 안내 및 홍보, 이용자 초기 인터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계약 및 변경), '2. 주거'(주택이해, 주거지 선택 및 계약, 이사, 주택관리 및 유지), '3. 지역사회 생활'(자기관리, 가사 관리, 개인안전, 금전관리/경제관리,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4. 사회참여'(쇼핑, 교통수단 활용, 여가활동, 지역사회 활동, 취업 및 진로, 교육), '5. 건강지원

'(건강관리, 의료/재활기관 연계, 응급의료 지원), '6. 옹호활동'(선택 및 자기옹호, 의사소통, 성생활), '7. 인식개선'(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8. 기타 서비스 지원'임.

- 대부분의 문항에서 '적절하다' 혹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응답함.
- 영역 중 가장 높은 적절하지 않다(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의 의견을 받은 항목은 영역 1(입주 전 안내 및 연계) 항목으로, 2.79%가 해당 영역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함.
-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적절하지 않다(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의 의견을 받은 하위영역은 영역 6(옹호활동) 내의 '성생활'이었으며, '성에 대한 이해(연애 및 성생활, 자위행위 등), 피임방법 등 안내, 동의/거절/도움 청하기, 피해를 받았을 때 방법 안내'와 같은 예시를 설문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6.29%가 해당 영역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었다는 기타의견이 있는 반면, 시설과 같이 프로그램화 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상황 등을 경계하며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응답도 있었음.

V. 결론 및 제언

○ 장애인 주거지원의 개념

- 장애유형과 연령대 및 욕구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성과 주거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거안정성의 영역: 지역사회의 주거를 기반으로 주택의 입지선성, 주거비 지원,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는 것
- 주거편의성 영역: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 및 일상생활,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각종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 입주 전 안내 및 연계, 주거, 지역사회 생활, 사회참여, 건강지원, 옹호활동, 인식개선, 기타 서비스 지원으로 총 8개 영역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 개요

<p>1. 입주 전 안내 및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 서비스 안내 및 홍보 ■ 기준 2: 이용자 초기 인터뷰 ■ 기준 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기준 4: 서비스 계약 및 변경 <p>2. 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5: 주택 이해 ■ 기준 6: 주거지 선택 및 계약 ■ 기준 7: 이사 ■ 기준 8: 주거관리 및 유지 <p>3. 지역사회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9: 자기관리 ■ 기준 10: 가사관리 ■ 기준 11: 개인안전 ■ 기준 12: 금전관리(경제관리) ■ 기준 13: 돌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 ■ 기준 14: 보조기기 	<p>4. 사회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5: 쇼핑 ■ 기준 16: 교통수단 활용 ■ 기준 17: 여가활동 ■ 기준 18: 지역사회 활동 ■ 기준 19: 취업 및 진로, 교육 <p>5. 건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0: 건강관리 ■ 기준 21: 의료/재활 관련 기관 연계 ■ 기준 22: 야간 등 긴급사항 <p>6. 옹호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3: 선택 및 자기옹호 ■ 기준 24: 의사소통 ■ 기준 25: 성생활 <p>7. 인식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6: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p>8. 기타 서비스 자원</p>
---	---

- 아직 현장에서는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용 또한 유사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음

○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기 위한 조건

- 첫째,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과 예산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1년 4월 20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주거지원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재원 혹은 기존 재원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입주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자는 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을 지원하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질적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제공기관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주거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외부의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거지원서비스 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식에 대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 마지막으로, 주거지원서비스의 광역단위의 중간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업무 수행을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나 체계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지역주민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에서의 주택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의 전부였고, 지역사회에서의 가정과 같은 집 형태의 주거는 그리 고려되지 못하였다. 장애인이 주거를 기반을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만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주택공사(SH)가 공급한 공적인 주택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과 다른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차인의 독립을 돕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말한다(민소영 외, 2019).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통상 주거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혹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는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에 제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4가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애인 정책분야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중심으로 2012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4시간 생활공간으로 ‘주택(주거공간)’과 ‘주거서비스’가 패키지로 제



공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분야에서의 거주서비스는 상기에서 언급한 주거지원 서비스와는 기본 원칙 및 개념부터 차이가 있다. 이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거주서비스가 지역사회서비스와 연속적이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김용득 외, 2008). 이는 현재의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거주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설 내’에서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기본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성과가 인정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자신이 원하는 주택에 개별적이고 스스로 선택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 기반의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 정책 중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분리하고, 낮 동안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은 우선적으로 거주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향후 다양하게 설계될 지역사회 기반의 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다른 수준일 것이다.

한편, 상기에서 언급한 「주거기본법」에 의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서비스의 개념은 평가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주거서비스는 인증¹⁾을 기반으로 서비스 내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주로 하드웨어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거서비스’란 사용자가 주거를 탐색, 소유·임대하고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전 과정에서 물리적,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거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에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주거서비스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주거서비스는 “거주하는 주택을 매개로 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관련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택내부, 주거단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여가, 보육, 돌봄 등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지원, 주택성능확보 및 유지관리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²⁾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주거서비스는 공동체 활동지원과 생활지원을 포함한 가사, 여가,

1) 주거서비스 인증 목적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인증평가를 위한 주거서비스 계획수립 가이드라인과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수립 단계,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서수정, 2017).

2)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제2조(정의)

일상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의미하며, 공동체 활동지원은 동아리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및 공유경제활동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각종 편의시설(Hardware)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지표로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운영,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지원계획, 긴급대응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평가영역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반(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협의의 주거지원서비스는 협의의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른 독특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김혜승 외, 2013). 즉, 주거지원서비스 영역은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이전 단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중 최초로 지원주택 모델을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와 추진 노력을 시작한 서울시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8년 5월 3일 공포하였다. 조례 제2조2항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조례 제3조3항에는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종류로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 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등 8가지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1년 8월 2일 중앙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기반의 최저서비스기준이 아닌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애인 주택에서 생활하게 될 주거지원서비스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국토부에서의 주택공급에 치중된 주거서비스와 서울시의 지원주택에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정하고, 이러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개별적 주택을 가정하면서 첫째, 이에 대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둘째,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을 검토하고, 셋째, 현장전문가 등의 통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의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절차, 인력 기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절차

1)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문헌검토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국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등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서울시의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전국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과 그룹홈 등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서비스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2)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기반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전국에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에서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그룹홈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3) 현장방문 및 개별과 집단 인터뷰 실시

본 연구는 개별주택기반의 주거지원서비스 내용과 기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양적조사 이외 지역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개별면접 및 집단 집단인터뷰와 서면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4) 전국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층현복지관에서 실시한 “성인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크리스트 연구”(오단이 외, 2021)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해당 설문지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차원적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지 점검하여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적절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3년 걸쳐 조사내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현장전문가 FGI 및 서면의견조사 등을 통해 설문조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영역과 기준에 대해 전국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도식화한 연구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Ⅱ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

1. 주거지원의 개념과 범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성을 일깨우는, 감동을 주는 공간에서의 일상, 유년기부터 죽는 순간까지 스쳐가는 시간들 [...] 나는 집을 ‘살기 위한 기계’라 명명하며 주거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온전히 인간을 위한, 인간을 건축적 창조의 중심에 두는 [...] 분리할 수 없는 주거-도시계획”(Le Corbusier, 1957; 이길임, 2011에서 재인용)

주거(住居)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과 그러한 주택이 위치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환경’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거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주거의 개념을 다룬 문헌들(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 2021; 국가인권위원회, 2014; 국토연구원, 2010; 김경미, 2009; 박수경 외, 2021,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이길임, 2011; 이연숙 외, 1990)은 주거의 어떠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주거의 사전적 정의와 일부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주거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주거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주거의 개념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주거의 두 가지 유형(물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 분류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재정리함으로써, 주거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적 토대와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마련을 위한 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주거의 개념

국내에서 주거 개념의 명확화 및 일반화를 시도한 초기 연구(이연숙 외, 1990)에서는 주거의 개념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거의 의미나 기능, 본질, 이미지 등의 단어들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



여 서울시 중계동의 집합거주지역(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주거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연숙 외(1990)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의 개념은 크게 주택외부특성과 주택내부 특성으로 구분된다. 주택외부특성은 집주변의 환경적 특성(자연·인적 환경)과 지역 사회시설 특성으로 구분되며, 주택내부특성은 내부공간의 인간적 측면(심리·행위 적 측면)과 내부공간의 물질적 측면, 내부공간의 시설,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내부공간의 인간적 측면의 구체적 범주는 기능적 장소, 생활의 장소, 휴식의 장소, 안전의 장소, 사회적 장소, 표현의 장소로 구성된다(〈표 II-1〉 참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앞서 주거의 사전적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거는 인간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주택내부특성)이라는 의미 와 이 같은 주택이 위치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또는 환경(주택외부특성)이라 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1〉 주거의 개념

큰 범주	작은 범주	구체적 범주	구체적 표현
주택 외부 특성	집주변의 환경적 특성 (자연·인적 환경)	—	주거환경이 좋은 곳/ 이웃이 좋은 곳/ 깨끗한 곳/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 소음공해에서 탈피, 청결하고 조용한 곳/ 자연과 접하는 곳/ 주변장소가 중요
	지역사회 시설특성	—	시설이 좋아야/ 교통이 편리/ 학교문제/ 학교 안따지는 동네/ 편의시설 갖춘 곳/ 시장이 싼 곳/ 사치스럽지 않은 곳/ 경찰서 있는 곳
주택 내부 특성	내부공간의 인간적 측면 (심리·행위적 측면)	기능적 장소	바깥 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편리성과 쾌적성/ 구성원에 맞는 구조인 집/ 식생활을 해결/ 기능적인 집
		생활의 장소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야/ 생활의 전부를 보내는 곳/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휴식의 장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곳/ 식구들이 안락함을 느끼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쉴 수 있는 곳
		안전의 장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자유스럽다는 분위기/ 강도 침입 등의 위험에서 보호/ 소유의식을

큰 범주	작은 범주	구체적 범주	구체적 표현
			가질 수 있어야/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곳
		사회적 장소	가족이 모여살고/ 대화할 수 있는 곳/ 화합할 수 있는 곳/ 식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곳
		표현의 장소	개인생활을 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곳/ 개성있는 곳/ 멋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
	내부공간의 물질적 측면	—	자기가 갖추고 싶은 가구를 놓을 느낌이 확보되어야 함
	내부공간의 시설 구조적 측면	—	냉난방이 잘되고 좋아서/ 답답한 느낌이 없는 곳/ 든든해야/ 구조가 중요

출처: 이연숙 외(1990), 언어적 표현을 통해 본 주거의 개념에 대한 탐구적 연구, p.56

2) 주거지원의 개념

앞서 살펴본 주거의 개념에 근거해보자면, 주거지원은 인간이 보다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주택내부특성—과 이 같은 주택이 위치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또는 환경—주택외부특성—모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주거 개념은 주거의 어떠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연숙 외, 1990).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거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 중,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주거복지(국토연구원, 2010)의 개념과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또는 환경을 강조하는 주거지원(국가인권위원회, 2014)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주거의 특정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지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주거지원서비스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1) 주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한 지원방식: 주거복지³⁾

주거란 인간이 생활하는 거처로서 물리적인 공간과 그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주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

3) 본 항의 내용은 국토연구원(2010),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pp.10~12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란 인간의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진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주거복지는 주거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주거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공공부문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는 국민의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제반시책으로 공공부문의 제도와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세훈(1999)은 주거복지를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주거학회(2007)에서는 주거복지를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개별가구가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거복지백서」에서는 주거복지를 '개인 및 가족의 주거기본욕구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정의들은 주거복지의 목적이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보장하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가 개인별로 다양하고 무한하므로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주거복지를 논할 때는 최소한의 주거욕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성규(1998)는 매슬로(A. Maslow)의 인간욕구위계에 따라 주거욕구를 욕구의 수준에 따라 생리적·안전 욕구, 소유·경제적 욕구, 사회적·문화적 욕구로 구분하였다. 생리적·안전 욕구는 가장 낮은 수준의 주거욕구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중간단계인 소유·경제적 욕구는 주거공간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는 주거를 통해 사회적·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 중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충족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거욕구는 생리적·안전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주거복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고, 이러한 거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거주하는 가구가 이러한 거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복지는 수혜대상에 따라 협의적인 것과 광의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협의의 주거복지는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전적 지원 및 기타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광의의 주거복지는 전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승, 2007).

(2) 주거의 사회적 특성을 강조한 지원방식: 주거지원⁴⁾

주거지원이란 주거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주거지원의 목적은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에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공공주택입주권보장, 소규모 주거시설 이용기회 보장, 주거비 지원, 지역주민과 갈등 시 중재 및 옹호, 주거정책 옹호 등 정책관련 사항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주거 편의성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와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편의지원을 뜻하는데 주택이나 방에 대한 정보제공, 이사지원, 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 주택의 수리나 보수지원, 일상생활기술 지원이나 훈련, 청소나 세탁의 대행, 시설안전관리 지원, 정신보건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포괄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이와 같은 주거지원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거지원과 유사한 용어로 혼용되는 주거복지는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장세훈, 1999). 한편으로는 주택정책의 차원보다는 복지적 급부의 차원에서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본 항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pp.11~12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주거지원의 개념은 앞서 국토연구원(2010)에서 제시한 주거복지의 내용이 주거안정성이라는 개념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거복지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다소 협소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주거편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거의 사회적 특성을 보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2014)에서 제시한 주거지원의 개념을 국토연구원(2010)의 주거복지 개념과 대비하여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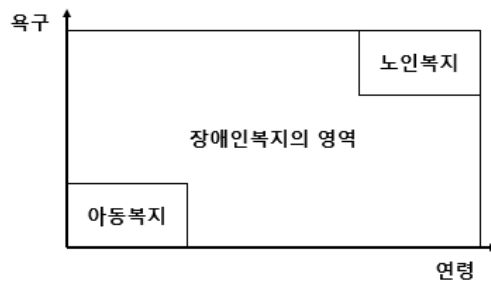


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설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은 주거의 물리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 모두를 고려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형태의 주거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동의 문제(mobility problems)나 고용, 자립, 사회참여,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8)등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는 포괄적인 형태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2014)의 ‘주거지원’ 개념을 준용하되, 국토연구원(2010)의 주거복지 개념을 주거지원의 하위개념인 주거안정성 영역에 포함하여 주거지원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은 아동이나 노인과 달리 일정 연령대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선천적으로 또는 생애의 전 과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욕구 또한 매우 광범위한 실정이다(김진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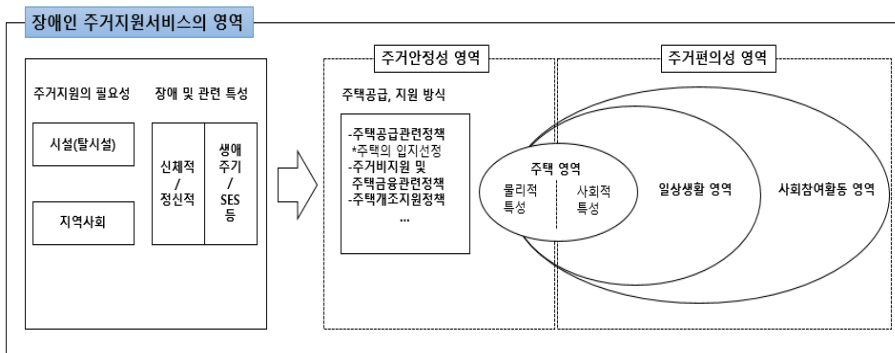
[그림 II-1] 장애인복지의 연령대 및 욕구의 특징

출처: 김진우(2019), 장애인복지론, p.55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범위를 고려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연령대 및 욕구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장

애노인의 경우 주거지원의 목적이 주로 주택 내에서의 일상활동이나 돌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다양한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입지 조건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주거지원 필요성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탈시설 운동과 최근의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에 그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노화나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노후나 사후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 장애 자녀의 자립과 이를 위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애인 주거지원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경우,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이 가능한 성인 장애인과 장애 노인에 주요 대상으로 하는 자립적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2. 주거지원의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의 개념은 인간이 그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과 그러한 주택이 위치한 지리적 혹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환경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특정 대상의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선행연구들 또한 주거의 어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거지원의 대상이 장애인으로 설정되는 경우, 장애인은 장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주거지원의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테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애는 특정 생애주기 상의 구분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이들의 욕구는 장애라는 특성과 결합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거는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거지원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주거를 바탕으로 자립이 가능한 성인 및 노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자립적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이후, 앞서 설정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즉, 주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한 지원방식인 주거안정성 영역과 주거의 사회적 특성을 강조한 주거편의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필요한 혹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주거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별 기준

1) 주거안정성 영역

주거안정성의 영역은 주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한 지원방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내·외의 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이 포함된다. 국내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은 지원 내용에 따라 크게 주택공급 관련 정책,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 관련 정책, 주택개조지원 정책으로 구분(국토연구원, 2010; 2016)해볼 수 있으며, 이는 국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공급 관련 정책은 공공이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 관련 정책은 주거비를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거나 주택마련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각종 대출프로그램이 있다. 주택개조지원 정책은 노후화된 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거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1) 국내⁵⁾

① 주택공급 관련 정책

○ 공공분양주택의 장애인대상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이 추천하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부모가정,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등이 대상이 된다.

장애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군인, 한부모가정,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등의 대상가구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거나 일정물량이 장애인에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5) 본 항의 내용은 국토연구원(2016),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pp.57-77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애인대상 주택공급

임대주택의 종류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주택 및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2014-2018)에서는 공공장기임대주택 건설시 5%(수도권 8%, 그 외 지역 5%)이상 범위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9)에서는 '18년~22년'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0.2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전용면적 기준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에서 공급한다.

장애인의 경우 우선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과 함께 일반공급 1순위 대상에 해당된다.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무기간이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장애인은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 함께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은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장애인의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세대주에 한함),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과 함께 공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40% 수준이다.

다가구매입임대의 1순위 공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의 경우 2순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사업 물량의 10% 범위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주거지원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급되는 물량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그룹홈 등으로 할당공급하고 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다가구매입임대와 거의 유사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정책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의 경우 2순위에 해당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장애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에 대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주거약자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수도권에서는 세대수의 8%(수도권 외 5%)이상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구비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약 180가구 규모로 처음 공급이 시작되었다.

②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 관련 정책

○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 실시되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현금지급)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현물지급)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만족하면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임차주택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시 최장 2년간 매월 3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우대조건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은 기존의 전세자금 지원 제도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제도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통합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지원대상은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이고, 대출금리는 보증금 및 연소득에 따라 연 2.3% ~ 2.9% 수준이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상품이다.

대출대상은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가구의 경우 다문화가구, 신혼부부가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과 함께 연 0.2%의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③ 주택개조지원관련 정책

○ 수선유지급여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기존 5개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유사주택개량 사업(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예로 집수리사업))이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로 통합·일원화되었다.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노후도 점수가 높은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을 추가하여 주택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편의시설 지원 공통 항목은 출입문의 통과너비 확대, 여윌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및 조작성이 편리하도록 출입문 손잡이 설치 및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정, 비상연락 장치 등이 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고령자, 지체·뇌병변 장애인(현관 경사로 설치, 비디오폰 높낮이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 부엌의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조절, 좌변기 옆 여윌공간 확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거실, 침실 조명등 설치 지원) 주택의 편의시설 중 특수시설을 지원한다.

○ 각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정부의 정책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과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다.

서울시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주택 보급)에 근거하여 서울시 거주 장애인가구에 대해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등의 주거편의지원 공사를 지원한다. 대상은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로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가 시급한 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경기도의 경우 중증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복의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도 및 시군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2>와 같다.

〈표 II-2〉 주거안정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의 종류

구분	종류	내용
주택공급 관련정책	공공분양주택 장애인대상 특별공급	·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이 추천하는 가 구(장애인 포함)에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장애인대상 주택공급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주택 및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구분
	영구임대주택	· 장애인의 경우 우선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으 나, 일반공급 1순위 대상에 해당
	공공임대주택	· 장애인은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 장애인은 우선공급대상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의 경우 2 순위에 해당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의 경우 2 순위에 해당 ·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장애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 관련정책	주거약자용임대주택	·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 대주택 건설시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편 의시설이 구비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적 으로 건설한 주택
	주거급여(임차급여)	· 장애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만족하면 임차급여를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 임차주택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시 최장 2년간 매월 30만원의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지원대상은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주택개조 지원정책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장애인가구의 경우 연 0.2%의 금리 우대 적용
	수선유지급여*	· 장애인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
	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	· 서울시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수선유지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기존 5개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유사주택개량사업(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량,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집수리사업)이 통합·일원화된 사업임.

출처: 국토연구원(2016),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pp.57-77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2) 국외

① 미국의 주거지원 정책

미국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에 관련된 문제를 장애인의 생존과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접근성, 안전성, 위치 및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주거지원정책은 이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주택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s)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이 민간 주택시장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공주택청(Local Public Housing Agency)이 집주인에게 보조금을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택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바우처를 보유한 해당 가구는 임대료와 보조금 사이의 차액을 지불하며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ICDR, 2020).

○ 비노인 장애인 바우처 프로그램

비노인 장애인 바우처 프로그램(Non-elderly Disabled Vouchers)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비노인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민간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정 개발 바우처와 지정주택 바우처가 있는데, 특정 개발 바우처는 장애가 있는 비노인 장애인 가구가 특정 개발에서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에도 선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노인 장애인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얻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활용한 다(ICDR, 2020).

○ 주택도시개발부 제811조 프로그램

제811조 프로그램(Section 811)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주택도시

개발부의 프로그램으로 비-프로젝트 주택 개발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쾌적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신규 또는 기존 주택 개발과정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주택도시개발부 제202조 프로그램

제202조 프로그램(Section 202)은 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함께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노인과 장애 노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교통, 요리, 청소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ICDR, 2020).

○ 보훈 장애인 주거지원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와 보훈부(Veterans Affairs)가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주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장애와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이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집을 구매하거나 개조할 수 있다(ICDR, 2020).

○ 농림부 제515조

농림부 제515조 프로그램은 농촌개발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프로그램 사무소를 통해 건물 또는 토지 매입, 건축물의 건설 또는 개보수,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필요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제515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정되며, 본 조항의 적용 우선순위는 표준 이하의 조건에 거주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다(ICDR, 2020).

② 영국의 주거지원 정책

영국의 주거지원정책은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Fair Society)를 모토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는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집을 찾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고 일을 지속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주택이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임대료 상승에 직면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정책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영국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HM Government, 2011, 2021;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21).

○ 주택공급정책: 주택공급의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

영국의 주택공급정책은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를 토대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영국의 평등 및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택공급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EHRC, 2018).

-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담보한 주택의 공급
- 주택 내 장애인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
-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택의 공급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사회주택 및 저렴주택의 개혁

영국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 및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은 지방정부와 주택조합(등록된 사회적 임대인)이 임대하고 시장이 주거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특정 자격을 갖춘 가구들에 공급되는 주택(남영우, 2019)을 의미한다. 특히,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부터 2026년 사이에 건설되는 180,000채의 저렴주택 중 10%를 지원주택으로 할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Care and Support Specialized Housing 기금의 조성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특수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HM Government, 2021).

○ 주거지원의 질적 향상

주거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과 기회의 제공, 그리고 취약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M Government, 2011). 특히, 장애인의 경우, 집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임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평등법(Equality Act)에 근거하여 집주인에게 건물의 복도, 입구 및 계단 등의 개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M Government, 2021).

2) 주거편의성 영역

주거편의성의 영역은 주거의 사회적 특성을 주로 강조한 지원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 및 일상생활과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각종 훈련이나 편의지원 이틀테면, 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이사지원, 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 주택의 수리나 보수지원, 일상생활기술 지원이나 훈련, 청소나 세탁의 대행, 시설안전관리 지원, 각종 관련 서비스 연계,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장애유형이나 연령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등이 반영될 경우 그 종류와 범위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자립이 가능한 성인 장애인과 장애 노인에 초점을 맞춘 자립적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여기에서 장애의 유형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 상의 15가지의 장애유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게 될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방대해질 수 있으므로, 장애종류의 체계적 분류표(〈표 II-3〉 참조)상 대분류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3〉 장애종류의 체계적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류
신체적장애	외부장애	외부에 드러나는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감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내부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출처: 김진우(2019), 장애인복지론, p.27

(1) 신체적 장애

① 국내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주택’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었으며, 이를 위한 연구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김용득 외, 2009)가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대형시설의 의미가 아닌 거주(Accommodation) 지원과 개별적 지원(Personal Care)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여기에 해당)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대안적인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이에 수반되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용득 외,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였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동향을 검토하였고, 서베이 조사와 관련 집단 의견조사를 토대로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제안하였다. 전체 40개 서비스 최저기준을 관련 내용과 특성에 따라 9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구분	최저기준	구분	최저기준
1.시설의 선택	1.서비스 이용자 안내 2.이용 상담 3.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4.예비방문 5.계약	6.케어활동	21.개별지원 22.건강관리 23.약물관리 24.노화와 사망
2.개인의 욕구와 선택	6.욕구사정 7.개별서비스 이용계획	7.환경	25.시설과 설비 26.개인침실:공간요구 27.개인침실:가구와 시설물 28.화장실과 욕실 29.공용공간 30.보조기구와 설비 31.위생과 감염예방
3.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8.의사결정 9.참여 10.위험관리 11.비밀보장 12.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13.이의제기	8.직원관리	32.역할 33.자격과 자질 34.직원구성 35.훈련과 개발 36.지도감독과 지지
4.능력개발	14.개인적인 발전 15.교육과 직업 16.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9.시설운영	37.질 관리 38.정책과 절차 39.기록유지 40.안전한 실천
5.일상생활	17.여가 18.관계 19.사생활 20.식사		

출처: 김용득 외(2009).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최저기준의 이해, p.16



○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자기결정력을 키우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자 실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이선우, 2008).

이러한 자립생활은 장애인 스스로 어디에 살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탈시설화와 맥을 같이 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족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장애인은 일상적인 선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생활시설이나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철저한 그러나 일방적인 보호는 장애인에게 ‘완벽한’ 안전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장애인이 위험에 처할 권리 또는 실패할 권리—그럼으로써 이러한 위험과 실패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자립성을 키울 기회를 갖고 삶의 기회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다(김경미, 2009).

가족이나 생활시설에 의한 의존에서 벗어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홈은 비장애인들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제공해준다.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의존적인 관계에 익숙해지도록 결과적으로 강요당해 온 장애인에게는 낯설고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은 경우가 많다.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생활의 이념 하에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자기 통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장애인에게 자립을 경험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경미, 2009).

이와 같은 이념과 실천전략 하에, 2021년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일상생활능력, 건강정도, 금전관리, 일상생활 적응행동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해당하는 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의 <표 II-5>와 같다.

<표 II-5> 자립생활 체험홈에서의 주거편의 관련 지원서비스

구분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능력	식사하기, 양치하기, 대·소변처리, 손·얼굴 씻기, 옷입기·벗기, 신발 신기·벗기, 머리감기, 목욕, 생리처리, 면도하기, 수면상태, 식습관, 사회성, 학습능력, 의사소통
건강정도	시력, 청력, 치아, 알레르기, 감염증, 호흡기질환, 생리, 감각상태, 건강상태 및 질환, 주보행방법, 보장구착용여부, 과거 진단력·치료

구분	지원서비스
	내역, 복용중인 약물, 피부상태, 가족병력, 체험홈 거주시 의료적지원이 필요한 사항
금전관리	돈 계산과 예산 관리, 구매기술, 상황평가
일상생활 적응행동	독립기능, 신체발달, 경제활동, 언어발달, 수와시간, 가사활동, 책임, 사회화, 직업 전/ 직업활동, 사회적활동, 적합성, 신뢰성, 성적행동, 자학행동, 사회적참여, 대인행동장애, 약물복약순응도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2021). 2021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관리운영지침, pp.46-56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 근육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생활 가이드북

최근 장애인의 탈시설이 가속화되면서 거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의 정착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그동안 비중 있게 고려되지 않았던 주거 및 주택에 대한 발견과 선택에 관심이 커졌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박수경 외, 2021).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방향으로 개인별 맞춤형 주거·돌봄·건강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다양한 복지기관에서는 장애인 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시 등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전환서비스센터와 자립생활 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을 위한 중간단계로 체험홈과 그룹홈과 같은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박수경 외, 2021).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권리 획득을 위한 활동 참여도 어려운 근육장애인들에게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육장애인이 앓고 있는 근육병은 UN이 정한 ‘5대 중증 진행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신체의 모든 근육이 진행성 위축 또는 근력 약화를 동반해 점차 스스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게 하여 보행과 모든 활동에 장애를 가져오는 만성, 진행성 질환이다. 또한, 비가역적인 특성이 있는 근육병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 보행단계, 휠체어단계, 침상 단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근육장애인은 진행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삶에 계속해서 적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심장근육과 호흡근까지 침범하여 불시의 사망위험 속에서 살아간다(박수경 외, 20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박수경 외(2021)는 리빙랩(Living Lab)⁶⁾ 방식에



근거하여 근육장애인의 주거환경 관련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육장애인의 주거환경 방안을 제시하였다. 근육장애인의 주거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거주장소 찾기, 주거환경 및 주택 내부구조, 보조기구 및 지원서비스, 관련 제도 및 정보제공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6>와 같다.

<표 II-6> 근육장애인의 주거생활을 위한 프로토타입 모델

Title	Subtitle	Details
Finding a Place to Live	Organized procedure for finding a home	An algorithmic description of how to find a home for those living with muscular disabilities preparing to live independently
	Methods for communicating with real estate agents	Outline communication methods that provide accurate standards for the difficulties that may arise between real estate agents without disabilities and wheelchair-bound home-seekers living with disabilities
	Qualifications and application methods for systems related to public/permanent housing	Details on LH public leases/permanent leases; SH national lease/out-of-pocket expenses for long-term leases; disability qualifications; out-of-pocket pay house remodeling
Living Environment and Interior	Required space for electric wheelchair extra width	Content based on the standard Ottobock B500, the wheelchair brand and model most widely used by those living with muscular disabilities Required space for 90 degree turns; cross-sectional view of front/side accessible storage space
	Living environment and furniture for each space	Separate descriptions of basic living conditions (for those living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optional feature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muscular disabilities), including overall living environments and furniture
Assistive Devices and	Required Assistive devices	Description of required Assistive devices based on behavioral processes, bed and shower

6) 리빙랩(Living Lab) 방식은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당사자가 실제 생활현장에서 능동적인 역할로서 설계 및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정책개발의 방식을 의미한다(박수경 외, 2021).

Title	Subtitle	Details
Assisted Services	for each stage of disease/disorder	conditions, and respiratory health
	Categories of Assistive support and assisted services agencies	(Cash/in-kind payment) Description of support agencies that provide equipment and description of different types of Assistive equipment
	Discount information for joint purchases of Assistive devices	Considering the lack of a control tower that provides organized information on purchasing Assistive devices,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in detail
Relevant Systems and Information	Benefits for purchasing vehicles for those living with disabilities	As independent living is not limited to residential life only,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on social activities
	How to use call taxis	
	Pensions for disabilities and those living with disabilities	However, writing in too much detail runs the risk of distorting the meaning; thus, only essential details should be included
	Helpful websites	Provide links to informative websites, such as associations, communities, foundations, medical information, welfare information, and partnered Assistive device organizations

출처: 박수경 외(2021).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근육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생활 가이드 북, p.78

○ 케어안심주택 운영 프로그램 매뉴얼

2018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1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가 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지자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중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강정배 외(2020)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기 위한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사례(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기도 화성시, 광주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김해시)를 비롯하여 특화형 통합돌봄 사례, 돌봄 SOS센터,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융합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 및 체계 구축방안(김동화 외, 2020)에서는 타 시도 장애인자립지원 관련 정책과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립생활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경북의 장애인자립지원체계 준비 및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북'이라는 비전 하에, 장애인의 안정적·체계적인 자립생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전략과제로 '인프라 확충', '경제,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주거지원'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는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남기철 외(2020)연구에서는 사례관리, 보건의료(방문진료, 영양관리 등), 요양(맞춤형돌봄 등 지역별 돌봄지원 서비스 연계, 일시재가 서비스 등), 일상생활(식사지원, 반찬 및 식자재 배달 및 지원, 동행 및 이동지원, 세탁 등), 주거지원(주거지 모색과 발굴 지원, 주거지 정착지원, 주거유지에 대한 지원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7>과 같다.

〈표 II-7〉 케어안심주택 서비스의 예시

서비스 분야 유형	프로그램 명 예시	비고
사례관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관리	케어안심주택의 필수 사항 최종 책임은 공공의 통합 돌봄팀
보건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연계
	방문재활치료	가정방문형의 재활치료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서비스 등 연계 활용
	퇴원환자관리	(요양)병원 퇴원시 통합돌봄팀과 연계하여 재가서비스 제공
	한방진료 연계	
	물리치료, 운동지도	방문 혹은 집합형 케어안심주택 내 공간, 지역 내 근접성이 높은 복지시설의 활용

서비스 분야 유형	프로그램 명 예시	비고
	복약지도	방문간호 등과 연계
	AI·IoT기반 건강관리	방문을 통한 바이탈사인 수집과 건강상담 정보를 입 력관리하여 병원 등 진료시스템과 연계
	영양관리	
	건강상담·건강검진	
요양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연계관리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의 연계와 활용 관리
	맞춤형돌봄 등 지역별 돌봄지원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식적 돌봄제도 이 외의 지역별 돌봄지원 관련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정기방문형 수시대응형 서비스	이용자 중심 정기순회 및 단기간 수시방문 요양서비 스 제공, 시범사업 연계
	가능회복서비스	주야간보호시간에 이용자의 기능회복 강화를 위해 물 리(작업)치료사 배치
	일시재가서비스	장기요양 등 기존 서비스 제도나 프로그램의 적용준 비기간에 혹은 기존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응하여 통 합돌봄팀의 욕구 사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식사지원	배달 혹은 조리 등 지원, 건강상태별 맞춤 식사 지원
	반찬 및 식자재 배달 및 지원	조리 및 자체적인 식사준비가 가능한 가구에 대해 식자 재 및 반찬 지원
	동행 및 이동지원	외출시 동행 도우미 파견, 이동차량 지원
	세탁	주기적 세탁 및 대형 세탁(이불 등)에 대한 지원
	가사지원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
	행정대행	필요한 행정사무 등에 대한 대행, 권익옹호
	정서지원	말벗, 일상적 안부확인 및 야간 안부확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적극 연계
	안전 및 알람	주기적 안전확인, 지역사회 알람 서비스
주거지원	주거지 모색과 발굴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주택의 거주이전 상황시 적절한 주택 물색 지원, 정보 제공, 거주이전 계획 지원, 필 요한 절차 및 행정 지원
	주거지 정착지원	거주이전이나 주거환경의 변화 상황에서 거주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행정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 스 연계
	주거유지에 대한	주거관련 비용에 대한 자원연계,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분야 유형	프로그램 명 예시	비고
	지원	주거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주택관리 및 공동주택생활 정보 안내 및 교육 등
	주거 상담	주거비, 주거환경, 주거 관련 사회적 관계망,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관련 서비스의 정보에 대한 상담
	단기 거주시설	가구의원의 필요시 단기간의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뢰, 기존 거주지 유지를 위한 자원 연계

출처: 남기철 외(2020). 케어안심주택 사례분석 및 제도화방안 연구, p.25

② 국외

○ 장애인 주거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소

장애인의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주택은 재활의 성과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Helander, 2000). 사람들은 자신의 주택에 머물면서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에는 주택 내·외부의 설계 방식은 재활의 목표와도 연결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시도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Shahrom & Zainol, 201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인 주거에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소를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주거욕구이론(Housing Need Approach)(Bramley et al., 2010)에 근거하여, 주거 특징, 디자인, 공간 및 접근성, 그리고 이들 요인을 포함하는 주거 리모델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장애인 주거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8>와 같다.

<표 II-8> 장애인 주거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구성요소

Author	Case Study	Housing Features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Planning and Natural Resources, Australia (2004)	Housing for seniors or disabled people	Wheelchair access, security, letterboxes in multi-unit development, car parking, entries, lighting, room size, corridors, bathroom, kitchen, location of room.
Dalilah (2011)	Laws for people with disability	Ramp, toilet, parking, lift, refuge

Author	Case Study	Housing Features
Verwer (2012)	Livable housing design guidelines	Dwelling access, entrance, parking, door and corridors, toilet, shower, kitchen, laundry, stairways, room, door, window, floor
Iowa Program for Assistive Technology (2004)	Universal home design: Convenience, ease and livability.	Step-free entrance, kitchen, bathroom, laundry, rooms, floor, windows, electrical outlets and controls.
NAHB Research Center (1996)	Re-modeling and universal design to make housing more comfortable and accessible.	Entrance, kitchen, door, bathroom, laundry area, window, parking and walks, stairs and floor surface.
Young (2006)	Rehabilitation, re-modeling and universal design in residential.	Entrances, general interior, kitchens, bathrooms, landscape, ramp
Yeans (2000)	Universal design in housing	Handrails, bathroom, doorways, kitchen, storage, interior circulation
Duncan (2007)	Universal design: Clarification & development	Desk, wheelchair access, entrance

출처: Shahrom & Zainol(2015). Universal design in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review, p.36

○ 신체 기능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9조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물리적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 중에서도 접근 가능한 주택이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본적인 접근성 구성요소가 없는 주택 환경은 신체의 기능적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실내 또는 주거 내 매우 제한된 공간에 국한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받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Cho et al., 2016).

접근 가능한 주택은 노령화 관련 기능 한계, 기타 장애인, 보호자 및 방문자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변경을 통해 의도적으로 건설되거나 달성될 수 있다. 게다가, 노령화 인구에서 기능적 한계의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



에 접근 가능한 가정 환경의 중요성은 향후 몇 년과 수십 년 사이에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Cho et al., 2016).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주거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신체 기능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9>와 같다.

<표 II-9> 신체 기능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요소

Intervention	Accessibility Features	Related Function
Home modification as a sole intervention	Targeting hygiene facilities (installation of grab bars in the bathtub or shower, replacing the bathtub with a shower), entrances including balcony and patio, stairways and doors (automatic door openers). A few adaptations targeting floor surfaces in bathrooms,	Mobility
	Wheelchair accessible doors, ramps, rails, tub seat in bathrooms, non-slip surface	Mobility
	Handrails, grab bars, ramps, hand-held shower, raised toilet, roll-in shower, widen door, relocating laundry facilities to ground floor, bed rail, designated parking area on street Lever handles on doors Additional lighting Safety features (deadbolts, smoke	Mobility & vision
	Lighting adjustments in the kitchen, bathroom, hall and living room	Vision
	Reducing glare, improving lighting Painting the edge of steps Installation of grab bars, stair rails Removing or changing loose floor mats, removing clutter	Vision & mobility
	Minor adaptations: handrails, grab-rails Major adaptations: stair-lifts, bathroom conversions providing level-access shower, extensions to provide	Mobility

Intervention	Accessibility Features	Related Function
	ground-floor bedroom, bathroom or both, stair-and through-floor lifts, installations of downstairs toilets, door widening, ramps, kitchen alteration Heating included	
Multi-component interventions	Installation of grab bars, rails, raised toilet seats Occupational therapy sessions (training of problem solving strategies, energy conservation, safe performance, fall recovery technique) and physiotherapy sessions	Mobility
	Light path installed near the bed with tele-assistance	Vision
N/A (Cross-sectional studies)	Hom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tocol: hazards (access to dangerous objects), adaptation (grab bars, visual cues)	Cognition
	Environmental accessibility barriers: wide doorways, ramps, railings, automatic doors, elevators, bathroom, kitchen or other modification	Mobility

출처: Cho et al.,(2016). Accessible home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functional limitations. A systematic review, p.7

(2) 정신적 장애

① 국내

○ 성인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연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다른 지역주민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이나 거주시설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한다면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립주거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주거영역까지 확장하여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충현복지관, 2019).



독립주거역량 체크리스트의 개발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 서비스 모형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해당 사업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 '지원생활모델(Supported Living Model)'이라 할 수 있다(충현복지관, 2019).

발달장애인은 자립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서구 복지국가들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지원생활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생활모델이란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이나 거주시설 소유의 주거공간(주로 그룹홈 형태)이 아닌 장애인이 권리를 확보한 자신의 집(In their own house)에서 당사자 스스로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충현복지관, 2019).

거주시설 뿐 아니라 '탈시설'을 목표로 주로 추진되는 소규모 그룹홈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자각 하에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삶의 통제권을 보다 확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원생활모델(Supported Living Model)이 제시되었으며,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니고 있다(충현복지관, 2019).

첫째, 주거와 지원은 분리되어야 한다. 주거와 지원이 종속 또는 연계되어 있을 경우,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 번에 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지원생활은 '집단'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온전히 당사자에 의한 선택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원생활 서비스는 관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중 충현복지관(2019)의 성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주거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 사업보고서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일상생활, 사회참여, 보건의료, 옹호, 주거 5가지 영역으로 나뉘었으며, 그에 따른 하위영역과 지원내용을 분류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별 자원내용

영역	하위영역	자원내용	영역	하위영역	자원내용	
일상 생활	자기관리	· 개인위생 · 이미용관리 · 신분증관리	사회 참여	쇼핑	· 생필품 구입 · 비용 지불	
	가사관리	· 수납정리 · 의복관리 · 세탁 · 음식물보관 · 음식물 조리 및 데우기 · 규칙적인 식사 · 주방가전 활용 · 주방정리 · 쓰레기 분리수거 · 집청소 · 가전제품 사용 및 관리 · 보일러 사용 및 관리		교통수단	· 대중교통 이용하여 · 목적지까지 이동	
		여가활동		· 여가활동 탐색, 계획, 실행	지역사회활동	· 낮활동 기관 이용 · 낮활동 기관 이용 예절 · 주민센터 이용
		개인안전		· 외출시 점검사항 · 조리도구 안전사용 · 소화기 사용방법		관계
			비상대응 계획	· 화재예방교육 · 긴급상황시 신고처 · 응급의료상황 대처		선택
				금전관리	·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 · 은행업무 · 생활비 관리 · 금융관련 중요 보안 사항	
보건 의료	건강관리	· 건강상태 표현 · 상비약 관리 · 병의원 및 약국 이용 · 복약순응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주거	주택이해	· 주택 계약	
				주거지선택	· 주거지 탐색	
				이사	· 부동산 연계 · 이삿짐센터 연계 · 전기, 가스, 수도, TV 개통 · 전입신고	
					주거관리 및 유지	· 주거환경 개선 및 업체 탐색

출처: 종현복지관(2019). 성인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주거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 사업보고서, pp.16-17



○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최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체계를 의미한다(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기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요자는 공급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공급자가 짜놓은 서비스 내용을 의무적으로 받아온 형태였다면, 현재는 수요자가 사는 장소로 공급자가 이동하여 수요자의 허락과 선택 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사는 장소 곧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주거공간이란 단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함께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형태를 지원주택이라고 한다(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지원주택은 표현 그대로 주택과 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한다는 의미로 지원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공이 제공 가능한 주택과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예를 들어, 사회복지, 의료/보건, 교육 등)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원주택은 당사자의 효과적인 사회재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당사자의 자기주도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지원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독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단식의 정형화된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되어야 하며, 입주자 욕구에 기반한 1:1 맞춤형 서비스지원 및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통합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돌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이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정신질환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예시

서비스 영역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건강영역지원	정신건강관리	자·타해의 위험, 정신과적 증상, 약물관리, 스트레스 관리, 병식, 음주 및 중독문제
	신체건강관리	신체질환, 건강검진,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기타 병의원 이용
생활영역지원	입주 및 퇴거	입주지원서비스, 퇴거지원서비스 등
	주거지유지관리	공과금, 임대료 연체관리 등을 통하여 주거유지와 관련된 문제 해결지원
	주택시설관리	주택유지보수 점검 및 관리, 주택안전관리, 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관리	자기관리, 식생활, 주간/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전화 및 교통수단 이용 등
	개인위생관리	위생, 청결, 용모관리 등
	가사관리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금전관리	재정 및 금전관리, 생활비관리, 저축 등 경제활동 지원
사회적영역지원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 등
	대인관계	가족관계를 제외한 다양한 인간관계, 사회기술 등 포함
	지역사회커뮤니티 연계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종교활동 및 지역사회 마을 활동 연계 등
	학업 및 직업	교육/고용에 대한 욕구지원,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주거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 자원연계 지원, 동료상담지원서비스, 자조그룹연계 등
	인권 및 사회적 안전	법적보호 및 옹호, 인권차별, 안전 및 폭력 등
기타영역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위 항목 외에 각종 서비스 지원(위기관리지원서비스 등)	

출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2019).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p.35

② 국외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일상생활기술(Daily Living Skills)은 인간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공통으로 일상생활을 반복하여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련의 신체 활동으로, 자립생활기술(Independent Living Skills)이나 자조기술(Self-help Skills)



로도 불리기도 한다(Allman & Lewis, 2014).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상생활기술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rolin(1993)의 생활중심 진로교육모형에서 일상생활기술, 개인적·사회적 기술, 직업 지도와 준비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영역과 생활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Cronin & Patton(1993)은 발달장애인의 성인이 생활 영역에 따라 일상생활기술을 고용과 교육, 가정과 가족, 여가생활, 지역사회 참여, 신체·정서·건강, 개인적 관계와 책임성으로 생활 영역을 구분하여 주요 요구 사항과 특정 생활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기술과 적응적 행동은 일상생활능력과 유사한 개념인데, 이를 조작화한 연구들에서, 삶의 기술 영역은 자기관리, 가사기술, 대인관계기술, 직업기술로 구분(Alwell & Cobb, 2009; LaRue et al, 2016)하여 발달장애인의 개별역량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행동에서는 주로 의사소통, 일상생활, 사회화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Matson et al., 2009; Woolf et al., 2010)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말하기, 집안일, 여가활동참여, 대인관계능력, 직업능력 등이 포함된다.

성인 지적장애인의 적응적 행동을 살펴본 연구(Heyman, Stokes, & Siperstein, 2016; Siperstein, Heyman, & Stokes, 2014)에서는 “나는 정해진 일과를 잘 따른다”와 “나는 친숙한 장소로 이동을 잘 한다”라는 문항으로 적응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발달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돈 관리,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스스로 건강을 돌봄, 지역사회이동능력 등으로 일상생활능력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Bennett & Dukes, 2014). 이들 연구가 각각 발달장애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 기술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II-12>과 같다.

〈표 II-12〉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구분	Cronin & Patton (1993)	Alwell & Cobb (2009)	Matson et al. (2009)	Woolf et al. (2010)	Bennett & Dukes (2014)	LaRue et al. (2016)
	성인기 생활영역	기능적 삶의 기술	적응적 행동	적응적 행동	일상생활능력	기능적 기술
1	고용과 교육	자기돌봄	말하기, 인지능력, 쓰기	의사소통	돈 관리	자기관리기술
2	가정과 가족	여가활동참여	식사, 옷입기, 위생관리, 집안일	공공장소이용	스스로의 건강을 돌봄	가사기술
3	여가생활	의사소통능력	시간과 돈관리, 전화하기	숫자세기	타인과 친밀한 관계 유지	지역사회기술
4	지역사회 참여	대인관계기술	직업능력	안전하게 공구다루기	옷을 빨래하고 구매	여가생활기술
5	신체	직업적능력	대인관계능력	청소하기	여가활동참여	사회기술
6			여가활동참여	여가활동참여	지역사회이동	행동관리기술
7			갈등대처기술	위생관리		직업 전 기술
8				갈등대처기술		직업기술
9				대인관계능력		
10				넘어지지 않고 달리기		

○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사회참여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의 세 가지 핵심 측면은 1) 가치 있는 활동에 시간을 보내고, 2)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3) 의미 있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Hall, 2009; Lemay, 2006; Wolfensberger, 1998).

사회통합 개념의 구성은 장애를 설명하는 사회적 모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해당 이론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와 실천의 출발점을 제공하는데, 이는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특징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공공재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요한 사회적 역할의 경험, 유능한 개인으로서의 인정, 지원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속하게 될 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경험은 다소 독특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한계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치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Meininger, 2010; Merrells et al., 2019).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경험은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이들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만듦으로써 그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errells et al., 2019).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평가절하된다는 것은 그들을 주류 사회에서 분리된 체로, 부정적인 역할 정체성을, 무의미한 삶을,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라는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Wolfensberger, 2000).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젊은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Merrells, 2019).

한편, 사회통합과 동의어로 활용되는 사회참여는 Wolfensberger(1998)에 의해 “가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활동에,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errells et al., 2018). 지적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의 중요한 측면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참여, 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속감을 갖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욕구이다.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는 삶의 질에 핵심적인 영역이자 인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Schalock, 2004; Merrells et al., 2018).

한편, 전환기 이후 중증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관한 다양한 문헌연구를 살펴본 결과, 지적장애인들은 주로 일상활동센터에서의 활동과 지역사회 내 민간 단체들이 운영하는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urdreault et al., 2019). 이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전환기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공교육이 종료되는 21세를 전후한 시기로 (특수)학교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의 종료와 같이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일정 시간(예로, 유년기와 성인기)을 지속하는 안정된 두 기간 사이의 변화 과정으로 정의된다(Chick & Meleis, 1986; Kralik, Visentin, & van Loon, 2006; Schumacher & Meleis, 1994). 특

히, 중증 지적장애인의 전환기 이후, 또 다른 교육에 참여하거나 유급 고용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의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APA, 2013), 전환기의 지적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공교육을 마친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직업의 선택권 또한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전환기를 맞이한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Bourdreault et al., 201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II-13〉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연결망 · 가족의 장애에 대한 지식 · 전환과정에서의 가족 참여 여부 · 가족의 소득수준 · 지적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 전환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 인적 지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 전환기 이후 제공 가능 서비스 ·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기 이후에 대한 적응 행동 · 도전적 행동 · 연령 · 장애 정도

출처: Bourdreault et al.(2019). Scoping review of soci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ith profound intellectual disability in adulthood: What can I do once I finish school? p.255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주거지원의 개념과 범위, 목적과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을 주거안정성과 주거편의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장애인 주거지원의 개념과 범위의 정립이 필요하다.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마련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거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주거 개념의 명확화 및 일반화를 시도한



이연숙 외(1990)의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당시 서울시내 집합 거주지역(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여 주거 개념의 명확화를 시도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주거의 개념을 크게 주택 외부의 특성과 주택 내부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주택 외부의 특성은 집 주변의 환경적 특성(자연·인적환경)과 지역사회시설 특성으로 구분된다. 주택 내부 특성은 내부공간의 인간적 측면(심리·행위적 측면)과 내부공간의 물질적 측면, 내부공간의 시설,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내부공간의 인간적 측면은 기능적 장소, 생활의 장소, 휴식의 장소, 안전의 장소, 사회적 장소, 표현의 장소로 구분된다. 주거 개념의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주거는 인간이 그 자신의 기본적인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에 더해,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적이자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주거 개념의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다양한 인간들의 삶의 기본 토대가 되는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삶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들의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이와 같은 주거의 다양한 특성과 전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장애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실현이 가능한 장애인 주거지원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주거지원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지원의 개념을 주거안정성 영역(주거의 물리적 측면 강조)와 주거편의성 영역(주거의 사회적 측면 강조) 구분하여 장애인 주거지원에 관련된 각종 정책의 내용과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같은 방식의 개념 재구조화 또한 장애인 주거지원에 필요한 개념과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다양한 시행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제공되었던 주거지원의 내용을 체계화함으로써, 장애인 주거지원에 필요한 내용들과 지원 주체들의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성과 주거편의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거안정성의 영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 지원,

주택개조지원 관련 사업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대상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정책 대상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에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수준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지원 상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는 한 이들 정책을 통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이 최근 장애인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향후 주거안정성의 영역에서는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하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거안정성의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위치적 혹은 지리적 특성이다. 장애인에게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주택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중심가보다는 주변부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거편의의 특성상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각종 근린시설이나 편의시설에의 접근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안정의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성들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취약세대를 일정부분 할당하는 소셜믹스 정책은, 해당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된다면, 주거안정과 주거편의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 장애인에게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거편의성의 영역에는 주거의 사회적 측면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역과 사회참여활동 영역이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체험홈이나 지원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을 통해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관련 서비스의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주거지원의 내용과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주거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는 특성에 더해 장애인의 욕구 또한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장애인 주거편의 영역의 이 같은 특성은 각종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던 서비스와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비스의 중복과 혼란을 예방하고 필요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거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담당부서 및 별도의 주거지원 전담 수행기관을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재정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설문지 개발 과정

1.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장애인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노숙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총 3곳(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을 알아보았다. 각 기관별로 대상자에 맞추어 제공되고 있는 주거지원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서 제공되어야 할 점 및 운영 시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강동구에 위치한 □ 장애인 지원주택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울 내 4개 권역별(서북, 동북, 서남, 동남)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SH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이외에 비공급형 주택에도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 내 재가장애인 및 연고자가 없는 그룹홈 이용자를 위한 체험홈도 운영하였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결과

분류	내용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매니저의 개인별 주거생활지원 계획 및 관리에 따른 주거코치 배정으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 개인별 장애특성 및 필요한 지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 · 주거(주택알선 및 계약, 임대주택 신청, 주택수리 지원, 이사 지원), 일상생활(개인위생, 가사관리, 건강관리, 금전관리, 개인안전), 사회참여(쇼핑, 대중교통 이용, 여가활동, 취업알선, 낯활동 연계), 옹호(법률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발



분류	내용
	<p>달장애인 신탁연계, 권리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초기 많은 지원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지면 점점 지원시간이 감소하게 됨. · 기존 LH나 SH가 하고 있는 주거복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리나 민원처리이며,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경비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대부분임. 해당 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거복지와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 및 지원의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본 기관에서는 기존 연구원 독립체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강지원 및 자기옹호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고민이 있음. 또한 해당 체크리스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타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함. 특히 신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보장구 관리 및 시설 내에서 지원이 되는 물리치료 등 재활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서비스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지원주택: 거주시설에서 자립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로 인해 정착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긴급/위기의 재가장애인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 독립을 희망하는 재가 발달장애인, 긴급/위기의 발달장애인 · 주거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야하며, 1인 1실이 원칙(나만의 집/공간을 가진 대상자)이어야함. · 방 1개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본인 소유의 집이라는 개인적 의미도 있지만, 보증금 납부 및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되기도 함.
주택환경 및 주거편의 관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의 지원주택의 경우 제공되는 지원주택의 수량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주택의 경우 장애인이 거주할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음(출입문 등). 따라서 주택 내 주거편의에 대한 기준안 등이 마련되어야함. -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인 33㎡를 적용하게 된다면 거주가 어려움(전동휠체어 및 일반휠체어 등 보관 공간 등이 없음). - 발달장애인에겐 안전 바 및 문턱제거와 같은 주거편의지원이 필요 없음. 오히려 있다면 기존 거주하던 가정과 환경이 달라져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함. 따라서 사람이 정해지면 공사를 하는 게 좋지만, 이러한 경우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비용 및 시간상의 문제로 힘듦.
탈시설 장애인 지원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 등에서 주거지원센터로 거주전환 될 때, 필수서류(통장 관련 내용)만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의류 등 필수생활용품이 없는 경우도 많음. ·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거주를 하는 동시에 서비스 지원 및 거주, 활동지원사 매칭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의 특징 및 지원관련 기록 등은 거의 없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양식들이 필요함. - 1달이라는 짧은 인계시간

분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후 입주까지 현재 1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짐. 다만, 자료요청 및 제공/인수인계/활동지원 매칭/편의시설 공사 등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 이에 대한 기간연장이 필요함(2~3달 정도).
개선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 선구축 필요 - 현행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택지원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공급과 동일 시되며,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임(주택지원 90%, 서비스제공 10%). 하지만 이러한 주택지원보다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나, 실질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별로 없음(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정도가 있음). 따라서 지원주택 및 서비스를 동시에 구축하기 이전에 앞서 서비스를 따로 구축해야함. - 이러한 서비스는 주거지원서비스 뿐만 아닌 지역사회 내 재가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며,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됨. ○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지원 필요 - 현행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지만, 24시간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사정상 근로시간을 맞추기가 힘들. 또한 공휴일 및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특성상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함.
유사 서비스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주택 - 자립생활주택 등에서 탈시설을 주도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 주거가 힘들. 또한 최근 자립생활주택을 통한 탈시설을 선호하지 않는데, 최장 4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자립생활주택서비스보다 지원주택의 경우 20년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임. ○ 주택 비공급형 - 기존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및 지원주택(공급형)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지원되어야 하며, 혜택이 적은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혜택제공 등이 필요함(활동지원시간 추가지원 혹은 개인주택에 대한 주거편의지원 등)

2) 노숙인 지원주택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 노숙인 지원주택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 중에서, 시설이용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있었다. 노숙인 지원주택 기관의 업무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노숙인 지원주택 현장방문 결과

분류	내용
제공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에게 독립적인 영구주택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재 노숙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 1명(서비스코디네이터 4명당 1명) - 서비스 코디네이터 4명(입주민 7명당 1명): 지원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1일 8시간, 주5일제 근무(휴일 교대근무)
제공 및 지원 서비스	<p>○ 제공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정착지원: 임대료 납부, 주택유지 관리와 관련된 대응, 주거 입주에 필요한 가구 구입 등 - 관련기관과의 행정적 처리 : 전입신고, 감면혜택안내, 자치 모임 구성 및 운영지원, 사회복지 제도 수급 등 -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서비스, 재정관리 및 취업지원, 입주민의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이웃주민과의 갈등이나 기타 주거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입주민이 지역사회 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활동 -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 지원, 정기적 방문을 통한 정서적인 교류, 질환의 재발 등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갈등관리 등을 통해 입주민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p>○ 지원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보증금 지원: 각 호당 300만원의 임대보증금 지원(○○○복지재단 지원) - 초기생활안정 지원: 거리노숙 상태에서 입주하거나 병원 퇴원 후 바로 입주한 경우 최장 3개월간 초기 임대료 및 생활비 지원(2명 110만원), 초기생활품 지원(입주민 전원에게 10만원 이내의 생활품 지원, 이불, 밥솥, 식기 등) - 생활 집기 등 생활품 지원: 주거독립생활에 필요한 기초물품 및 가구지원(침대, 가구, 냉장고 등 중고 물품 후원 활용) - 긴급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 입주민이 긴급한 수술 등으로 의료비 지원 및 주거비가 필요한 경우, 민간지원 및 공공 긴급의료비를 연계하여 지원(서대문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 사단법인 열린복지) - 프로그램 운영: 텃밭운영, 심리상담, 소규모 여행, 공동밥상, 반사회 등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전입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신청, 서울형 바우처 신청, 문화 바우처 카드신청 등 복지서비스 수급 시 필요한 행정 지원,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 중도 퇴거자의 주거 연계 등 퇴거 지원 -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약물관리 및 치료지원을 위한 병원 동행,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서비스 연계, 정기적인 정신건강사례회의(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월 1회,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월 1회)
서비스 연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수급 및 긴급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 등), 보건소 - 노숙인지원기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디딤센

분류	내용
	<p>터, 서울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관련기관: 각 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태화샘솟는집,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은평시립병원, 인화병원 등 - 주거지원기관: 각 구별 주거복지센터 - 기타지원기관: 이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긴급지원, 자금은 라디오 시대 등), CPBC 평화방송 바보의 나눔 - 지역사회단체: 거북골사랑방, 서대문 마을넷(마을축제 참여), 열린공간함께(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부업참여) 등 마을행사 결합
타 유형의 서비스 연계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 노인 / 정신건강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주택이 있으나, 이러한 지원주택 내 주거서비스에 대한 연계가 미비함 - 노숙인의 경우 노인이 될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많음.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거나 관련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주택 운영 및 관리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센터가 LH 산하 기관이라, SH의 주택을 임대하는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 - 거점별 주거관련 서비스(주택관리 등)가 제공된다면 이용자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임 -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을 LH/SH가 매입하는 경우 초기 수리 등을 진행한 이후에 입주를 시작하나, 일정기간 이후 발견되는 문제(결로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수선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라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큼. 따라서 일정기간 지원주택 수리 AS가 필요
개선필요 사항	<p>○ 맞춤형 서비스 및 참여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과 서비스제공자(코디네이터)와의 관계가 중요함. 하지만 이러한 관계 및 서비스 제공은 코디네이터의 역량 및 입주민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지원강도/서비스 제공 내용 등) -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므로 입주민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함. 층간소음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초기 주택정착 및 적응을 하는데 일정 안정기간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지원강도는 낮아짐. 다만, 대상별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필요함 - 약품복용거부나 개인자금사용 등을 막을 수단은 없음. 다만 지역사회거주를 위하여 입주민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필요



3)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과 노숙인 이외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해당 기관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1년 현재는 중간조직 역할인 주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주거서비스 제공 현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결과

분류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사업 활성화 · 서울시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형 독립주거모델사업’ 추진 논의 · 2019년 5월부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 시작 · 시범사업의 성과와 수요증가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정규사업으로 확대운영 - 서울센터의 역할: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면접선정심 의지원, 콘텐츠 개발, 효과성 평가 연구 -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주택 전반 운영 및 관리, 입주자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 · 2021년 주거서비스 질 향상과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 계획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주거전담인력 배치, 주거지원센터 역할 수행 - 주거지원센터의 역할: 서울시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컨트롤타워 기능(대상 자 발굴, 평가 및 기관 배치, 모니터링, 연구 등)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제37조)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1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비스 제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정신질환자의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 생활가정,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사회전환시설: 병원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쉼터,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이 제공, 최대 6개월(기본 3개월) - 공동생활가정: 독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일상생활의 큰 무리가 없는 독립을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주거서비스(취업 및 독립계획), 만15

분류	내용
	<p>세 이상 정신질환자로 낮시간동안 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또는 직장에 다니는 자, 최대5년(기본 1년 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서울시에만 있는 모델, 독립을 위한 적응단계로 공동생활가정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독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관, 만19세 이상의 정신질환자로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 예정 또는 직장유지 또는 일시적 휴직, 3개월 이내 재취업이 가능한자, 최대5년(기본 1년 계약) - 자립생활주택: 자립을 위한 발돋움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로 주거지(물리적 공간) 제공과 주거유지에 따른 경제적 지원,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 1호당 2인 거주(1인 1실), 만18세이상의 정신질환자중 자립의지가 있는 자(최대2년 거주) - 지원주택: 혼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1인 1가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완전한 독립적 주거의 형태, 당사자 본인 명의의 계약을 하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 만18세이상의 정신질환자중 자립욕구가 있고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이 가능한 자, 최대 20년(기본 2년 계약)
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센터 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 모집·배치 / 퇴소·퇴거시 서비스 연계 - 제공기관 모니터링 / 지표개발 - 효과성 연구 등 근거자료 개발
운영 시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인 / 룸메이트 간 관계를 중재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또한 사례관리자, 지역주민 등 기타 관계에서의 갈등 조정의 어려움 있음 - 퇴거와 관련하여 퇴거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임, 다만 주거계약이다보니 입주인의 권리가 우선시되어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계약과의 상충이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수 있음, 현재는 서비스제공계약을 통하여 주거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 서비스제공기관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함.
동료지원가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동료지원가를 통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음 - 경험적인 부분이나 공감 등 상담에 필요한 요소는 강점으로 작용함 -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지원가가 많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임, 전문적인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 필요.
개선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평가 지표 등 개선 필요: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도 유사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평가지표 등으로 인하여 입주인이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 등을 참여시킬 때가 있음, 따라서 서비스 실적(횟수)보다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율' 등의 평가요소가 필요함



2. 유사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검토

유사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관은 10여년 동안 자립생활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사회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온 2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며, 자립생활주택 운영기관 및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이었다.

1) 대구 A 자립생활센터 주거지원서비스 내용분석 및 자립생활주택 ILP

대구 A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자립생활센터는 인력의 한계로 소장, 국장, 동료상담가, 활동가들의 업무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홍보, 개인별 지원, 주택관리,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표 III-4〉 대구 A 자립생활센터 전체 업무분석 결과

구분	
대분류	소분류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일반 홍보 - 장애인 대상 홍보 - 종사자 대상 홍보 - 장애인가족 대상 홍보
입주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 교육홍보 - 특수학교 등 교육홍보 - 주택 견학 프로그램 - 탈시설 자립생활 캠프 운영
개인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자립생활 체험 - 장기 입주자 지원 - 강화형 ILP - 체험형 ILP - 동료상담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필요 자원 발굴/연계 - 이웃만들기 - 자조모임

구분	
대분류	소분류
공동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의 - 집담회 - 전문가 자문회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분석 연구 - 생애사 구술기록
퇴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알선 - 주택개조 - 이사 지원 -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 퇴거 후 정착지원
응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119 소방서 등 연계
담당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교육 - 기관협력 워크숍
주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보험업무 - 월별, 계절별 안전관리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자립생활주택에서의 개별지원 서비스 내용을 조사하였다. 아래의 내용을 기본으로 당사자의 개인별 자립생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당사자별 욕구에 따라 추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III-5〉 A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 ILP 항목

ILP 구 분	주요 내용의 예
의지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 생각하기 - 자기수용 하기 - 자존감 높이기 - 원하는 것 무작정 경험해보기
권리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알기 - 장애인 운동 알기 - 나의 권리 찾아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운동 참여해 보기 - 선배 장애인운동가와의 만남



ILP 구 분	주요 내용의 예
목표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욕구 찾기 - 나의 단기 목표 찾기 - 나의 장기 목표 찾기 -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구분 - 목표에 필요한 방법 생각해보기
신변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 침대(방바닥)에 눕고 일어나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머리감기 - 목욕/샤워하기 - 옷을 고르고 입기, 옷 벗어서 보관하기
활동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조서비스 이해하기 - 내가 필요한 활동보조 부분 찾아보기 - 내가 찾는 활동보조인 특성 생각해보기 - 내가 생각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스케줄 짜보기 - 활동보조인과의 흔한 갈등상황과 대처방법 알아두기 - 활동보조인 관리하는 방법 알아두기
가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래하기 - 청소하기(청소기 사용하기, 걸레질하기, 정리정돈하기) - 설거지하기 - 요리하기 - 가전제품 사용법 알아두기 - 특이한 용품 사용법 알아두기 - 내가 할 수 있는 가사관리 알기 - 내가 할 수 없는 가사관리영역과 관리 스케줄 짜보기 - 가사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곳, 방법 알기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상담 받아보기 - 나의 건강상태 알아두기 - 나의 컨디션 체크하기 - 나의 장애에 따른 필수적인 건강유익점 알기 - 계절별 건강관리 방법 알기 - 주야별 건강관리 방법 알기 - 내가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 알기 - 내가 할 수 없는 건강관리영역과 관리방법 생각해보기 - 의료 및 재활, 장애인 건강 관련 정보, 정책, 제도 찾는 방법 알기
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가는 곳에 대한 길 익히기 - 이동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기 - 시외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방법 익히기 - 시내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방법 익히기 - 이동할 때 내가 주의할 점 찾아보기

ILP 구 분	주요 내용의 예
보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생각해보기 - 나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상담 받아보기 - 보조기구 이용하는 연습해 보기 - 보조기구 신청해서 마련해 보기 - 보조기구 관련 정책, 제도를 찾는 방법 알기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내에서 나의 위치 생각하기 - 가족 구성원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보기 - 가족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나의 위치 생각하기 - 가족에게 존중받는 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점
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대한 평소 나의 생각 - 나의 성에 대한 평소 나의 생각 - 내 몸 이해하기 - 평등한 성 관계 만드는 실천하기 - 올바른 피임방법 등 성생활 알아보기 - 성생활 관련 정보 찾는 방법 알기
응급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별, 공간별, 성별 등 상황에 따른 응급상황 상상해 보기 - 재난상황에 대해 알고, 대처방법을 익혀두기 - 화재상황에 대해 알고, 대처방법을 익혀두기 - 응급상황 때 연락할 수 있는 자원목록 알아두기 - 응급상황 때 도움을 요청할 방법 찾아보기
소득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써보기 -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 나의 수입원과 그 금액 알기 - 내가 주로 지출하는 곳과 그 금액 알기 - 하루 계획~일주일~한 달~일 년을 짜서 실행해 보기 - 은행과 ATM기, 인터넷뱅킹 등 사용법과 주의점 알기 - 소득을 위협하는 각종 금융사기 알아보고 대처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하기 - 장애인 일자리 등 안정적인 소득원 찾아보기 - 소득생계 지원 관련 정책, 제도 찾는 방법 알아보기
취업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하고 싶은 일 생각해 보기 - 직장 정보를 찾는 방법 알아보기 - 취업에 필요한 자격 알아보기 - 취업준비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하기 - 직장 내 기본 예절 알기 - 직장체험 해보기 - 취업 관련 정책, 제도를 찾는 방법 알기



ILP 구 분	주요 내용의 예
여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시간 활용하기 - 낮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 찾아보기 - 지역 내 문화여가 프로그램 찾아보기 - 여행하기 - 취미 새로 만들기 - 문화여가 관련 정책, 제도 찾는 방법 알기
자기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생각 말로 얘기해 보기 - 나의 생각 글로 써서 기록해보기 -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나서서 표현해보기 -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 표현해보기 - 자기주장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성격 테스트 -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에 대한 차이 알기 - 관계 맺을 때, 유지할 때, 끊을 때 - 1:1로 동료들 만나 장시간 이야기해 보기 - 동료들 자조모임 꾸준히 활동해 보기 -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어울려 보기 - 처음보는 사람과 친구 맺어보기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에 대해 이해하기 - 의사소통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상황 이해하기 -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의사표현 방법 알아보기 - 내가 주로 하는 의사소통 방법과 다른 방법 생각해보기 - 내가 주로 쓰는 단어와 문장 찾아보기 - 직접 의사소통판 만들어 보기 - AAC 활용법을 알고, 직접 활용해 보기 - 의사소통 관련 정책, 제도 찾는 방법 알기
지지방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종류와 대표적인 자원 알아두기 - 나에게 필요한 자원 알아보기 - 내가 정착할 동네 속 자원 알아보기 - 옆 집 주민과 인사하기 - 주민회에 참여하여 인사하기 - 원하는 단체에 가입해 보기, 활동해 보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에 대한 특별한 요구(만성질환, 의료지원, 재활치료 등) - 영양관리에 대한 특별한 요구(질병(예: 암) 등에 따른 식단관리 필요 등) -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특별한 요구(공공후견제도 연계 등) - 가족관계의 유지/변화/단절 등에 대한 특별한 요구(연고, 재산 등) - 행동적 지원에 대한 특별한 요구(주택 내/외 환경/관계/서비스조정 등)

2) 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거지원서비스 내용분석

B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유사 주거 지원서비스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입주과정에서의 개인별 지원계획수립과 이 계획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권익옹호, 건강관리, 금전관리, 일상생활 관리, 사회활동, 여가활동, 긴급위기 지원 등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이고, 자립생활센터의 특성에 따라 동료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I-6〉 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업무분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입주자 자립지 원	입주 전 지원	단기체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 단기체험진행 - 사후지원 - 거주시설과의 협의
	입주 지원	입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신고 및 사회보장서비스 신청지원 - 이사 및 물품정리, 적응 지원 - 입주계약 체결 : 주택생활 안내 - 공공후견인 연계
	입주 과정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지원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파악, 목표설정, 서비스지원계획서 작성
		개인별지원 계획에 따른 ILP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심사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계약 및 이용 지원 - 활동지원사 면담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보장구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보장구(보조기기) 신청 및 관리, 사용 지원
			권익옹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 성교육 - 자기권리 옹호활동 참여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건강관리 지원(식생활, 운동 등) - 병원 지원 - 약물복용지원 - 긴급의료지원
		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정착금 신청 및 관리 - 수입, 지출 관리(가계부 작성) - 저축 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이용 - 필요 물건 구입하기
		일상생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관리 - 의·식·주 관리 - 스스로 일정관리 - 안전관리 - 동료입주자간 갈등중재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 - 우리 동네 편의시설 알고 이용하기(마트, 은행, 병원, 관공서 등) - 낯생활 이용기관 연계(야학, 주간보호센터, 낯병동 등) - 대인관계형성, 의사소통 지원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체험활동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연계
		지역사회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자원연계
		동료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상담 진행 지원
		긴급위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대처지원 - 긴급수술, 입원 지원 - 사건, 사고 대처 및 법률지원 - 실종지원 - 사망지원
	퇴거 지원	주택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에 관한 정보제공 - 금전상황 파악 - 임대주택 신청지원 - 주거환경 편의시설 파악 및 보완 -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탐색
		이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물품 구입지원 - 이사지원 - 전입신고 및 사회서비스 신청
		사후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거자 동료상담 - 담당자와 정기적 상담 통해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 확인 - 문제 발생 시 지원 연계
	사업 진행	홍보사업	
		입주자 모집/선정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개별LP진행
			집단LP진행
			멘토링사업
			자치회의
			긴급생활지원서비스
			교류사업
			담당지역량강화사업
			기능보강
			사후지원
자립 주택 운영 관리	안전관리		
	주택 운영	－ 공과금 납부 － 주택유지 보수 관리	
	비품관리		
	회계 관리	사업비 집행	－ 기안문작성, － 지출결의서 작성(회계 담당)
	행정 관리	연간·분기별 사업계획서작성 연간·분기별 사업보고서작성	－ 주택보험 가입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업무 형태 업무분석

2019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방안 연구(현명이·권혜영, 2019)에서는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며,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실태를 파악하였다. 해당 직무분석을 위하여 서울시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업무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크게 '사업 관련 업무'와 '행정관련 업무'라는 대분류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업무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사업관련 업무	가정 내 일상생활 지원	위생·건강관리, 식생활관리, 의생활관리, 취침 관리, 그룹홈 청소·정리정돈, 가정 내 여가생활 지원, 재정관리(이용자급여, 용돈관리 등), 가정 내 이동지원, 긴급(사고)지원
	사회생활 및 대외활동 지원	직업생활·낮 활동 지원,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 지원, 그룹홈 여행·건강, 자기개발 활동 지원, 여가·취미 활동 지원, 기타 대외활동 지원
	권익증진 및 이용자 역량강화 사업	자치회의(가족회의), 성교육·건강교육, 인권교육, 안전 및 위험대처 교육
	사례관리	면접 및 서비스 계약, 이용자 상담, 보호자 상담·간담회, 사례관리 관련 행정 업무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교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자원(후원) 연계
	그룹홈체험	그룹홈체험 지원 및 견학
행정관련 업무	주거관리	안전(장치 및 물품)관리, 생필품 구비(구입), 비품관리, 시설 개보수, 부동산 관리(주택계약관리)
	서무·행정업무	각종 기안 작성, 업무 일지 작성, 기타 서류 작성 및 보고
	회계·정산업무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이용료 후원금 수입지출 결의, 인건비 및 세금관리, 기타 은행업무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교육·워크숍, 토론회(네트워크), 자문·슈퍼비전
	법인회의·행사	운영위원회 및 직원회의, 법인행사

출처: 서울시복지재단(201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장애인이 3~4명정도 함께 생활하는 형태이다. 위의 업무분석 표에서 보면, 현재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정내 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 및 대외활동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은 주거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지원주택과 기존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주로 제공하였던 개인별지원, 공동생활가정의 가정 내 일상생활지원 등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철학과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크게는 집안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립생활 또는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3.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위한 FGI

1) FGI 실시 개요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거관련 서비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FGI를 실시하여 기관별 차이점 및 향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하였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들을 구분하여 총 3개 종류의 기관(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지원주택)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약 2시간정도 이루어졌으며, 녹취한 내용을 풀어서 기록 하였다. FGI 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II-8〉 FGI 참가자 정보

구분	직위	기관유형
참여자 A	센터장	장애인 지원주택
참여자 B	코디네이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자 C	사회복지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 FGI 분석 결과

FGI의 질문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별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현황,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질문을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FGI 분석 결과

영역	세부 내용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내 운영서비스: 단기거주시설 및 그룹홈, 주간보호시설 운영 중 - 빌라 내 위치해있으며, 5명씩 2개의 주택(총 10명) 거주 중 - 사실상 그룹홈은 물리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있으나 운영 측면에서 야간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 임. - 서비스는 입주민의 '재활' 을 중요시하며, 대형거주시설과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유형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음. - 개인별 주거생활 지원계획 수립부터 주택, 생활, 관계 및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별 지원계획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정신질환을 가진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의 기존 서비스를 연결해줌. 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센터를 연결해주고 관련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음. ○ 자립생활주택(4년까지 거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전환서비스' 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20년 기준 서울시 내 6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본 IL센터의 경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음(가형: 경증/중증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 있는 자, 다형: 중증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자). 다만, 최근 가형과 다형의 실제적인 구분이 사라지며, 대부분 인지능력이 없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최중증의 경우 야간인력 및 서울시 뉴딜일자리 인력이 지원됨. - 정신질환을 가진 이용자의 경우에는 직접지원이 어려우며,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함. 법적 문제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기관들을 연결해줌.
지역사회 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아진다면 주거지원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며, 서비스이용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익숙해지더라도 줄어들 것임.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되어야 하며 원하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되어 문제점이 있음.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갈등이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오히려 이용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중계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중개해야하나, 그러지 못하는 구조임. 따라서 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
주거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용어의 경우에는 주거지원서비스 보다 '주거서비스' 가 더 적합

영역	세부 내용
의 정의	<p>해보임. 지자체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주거서비스, 삶 전반에 관하여 지원을 받는다면 주거서비스 보다는 더 폭넓은 서비스로 지칭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지역 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중심의 지원서비스, 주거의 안정적 지원 및 입주자(이용자)의 권리(자기보호 강화, 주체성), 지역사회 내 관계 등이 포함되며, 지역 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C: 지역사회 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개별서비스/개인별 서비스
주거소유권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주거에 대한 소유권 여부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소규모 시설(단기거주시설이나 그룹홈)은 제외해야함. 만약 이러한 시설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룸메이트에 대한 서로간의 선택권이 있어야하며, 당사자 2인을 포함한 활동지원사 2명(총 4명)이 머물기에 적합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 B: 주거에 대한 소유권이 중요함. 자립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소규모 시설화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입주기한을 정하고 있음. 자립생활주택의 경우 신체장애인 등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어 지역사회 내 적응이 가능한 경우 적응기를 위하여 있어야 함. 발달장애인 등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바로 지역사회 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적용할 장애인 주택,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또는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및 평가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며,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면 입주민의 의사와는 별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게 되어 시설화 될 수 있음. 따라서 평가의 주요 지표는 지역사회 내 개별지원이나 자원 연계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함. - 지원에 대한 원칙(서비스 최저기준)과 같은 것이 있어야함. -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독립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함. - 공동의 기능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으며 통합적인 삶을 살아야 함.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연계가 가능해야 함. - 재가장애인 등을 위한 체험형 자립주택의 경우도 고려해야 함.
주거서비스 인증기준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의 권리와 자기결정이 강조되어야 함. - 지원주택은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지원되어야 함. -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물리적 개조가 필요하며, 장애유형별/당사자별 맞춤형 개조가 필요함(1인 가구지만, 실질적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2인 가구 형태인 경우가 많음). - 비공급형 주거지원서비스의 경우도 필요함. - 일자리 등도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지원이 필요함(아간근무 등). - 주택수리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함.



4. 소결

본 장에서는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현장방문과 유사서비스 제공 내용 검토, 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현장방문 기관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중 노숙인,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방문하였다. 3개 기관 모두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해당 주택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식으로, 주택은 SH와 LH와 같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며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서비스제공기관과 맺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주거취약계층별 필요한 지원에 따라 특성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주거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서비스들도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3개 기관 모두 ‘주택수리 및 관리’와 같은 분야를 어려워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 등의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활동 혹은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나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타 유사서비스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2개의 자립생활센터의 업무를 분석하고 ILP 항목 및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 목록은 기존 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형식과 유사하였으나, 일부 ‘지역사회 내 생활 및 연계’, ‘자립생활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같은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자립생활주택은 20년이라는 장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과는 다르게 최장 4년이라는 제한적인 기한이 있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기간을 늘리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이 연계 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FGI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로 살아가고 있는 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원주택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FGI 결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간보호시설이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함께 운영되어야 하며, 체험주택이나 비공급형 주거지원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V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1.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개요

1)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대상자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대상자는 현재 ‘주거지원서비스’로 지칭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운영기관과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현장 전문가 등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 14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총 14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주택지원센터,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사회서비스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관의 종류별로 나누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4명, 장애인 지원주택 4명, 공동생활가정 3명, 노숙인 지원주택 1명, 장애인 지원주택 중간지원조직 1명, 정신장애인주택 중간지원조직 1명이 참여하였다.

2)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문항

전문가의견 서면조사의 문항에 사용된 질문은 기존 문헌과 현장방문을 토대로 연구진이 구성한 질문이다.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료,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문항은 총 14개이며,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주거지원서비스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질문 내용

구분	문항 내용
1	·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 현재 주거지원서비스(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제공 시에 부딪히는 어려운 순간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문항 내용
3	· 주거지원서비스 영역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 주거지원서비스 영역과 활동지원서비스 간에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 주거지원서비스가 지니는 거주시설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설정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는 주로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대리신청 포함)하고,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과정은 어떠한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 이용자의 연고자 유무, 장애정도, 장애유형,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등 사회서비스 연계 정도, 기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배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 인력의 적절한 양성, 관리, 처우 등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 현행 장애인거주시설이 명칭 및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 법정 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한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자립홈 등 명칭 상이), 지원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원서비스 인프라는 향후 주거지원서비스 정립 과정에서 어떻게 안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3	·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 이 외 지역사회의 주거지원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제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2.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결과

1) 현재 주거지원서비스 현장에서의 어려움(질문 2번)

현재 ‘주거지원서비스’로 지칭되지는 않으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

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의 지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개념 구분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서비스 환경, 지원기관 운영, 기타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크게 확보되는 주택의 환경 구조, 동거인원, 주택에 대한 입주민의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확보되면서 노후주택이 많아 잦은 수리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증금이나 월세 마련을 해야 할 경우 주택개조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역시 발생한다. 또한, 두 명 이상 입주하여 살아갈 경우 공동 비용과 생활에서의 의견 불일치 등이 나타나 생활/지원 상 어려움이 있다. 지원주택의 경우에는 본인명의 계약의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통제권이 높으나, 자립생활주택 등은 그렇지 않아 주거유지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와 주체성이 낮다. 반면에 본인명의 계약 여부에 따라 운영기관이 퇴거요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비스 환경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주로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비스 양의 확보의 어려움, 입주민에게 적합한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주거지원서비스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 등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당사자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지원서비스 확보에서 1차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임에도 지금의 판정체계에서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재한다. 입주 초기는 물론 고령화나 노화, 중복장애나 추가적인 질환, 기능손상 등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이외 정신과적 증상, 위기상황,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생활 영위 수준 확보, 성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관한 지원 등 주거지원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점의 지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지원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주로 특정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24시간, 365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당사자의 삶을 지원한다는 특성에 맞게 지원기관의 근무조건, 권한, 역량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퇴근시간대 이후인 심야, 주말, 휴일 등에도 긴급상황 대응, 상담, 모니터링 등에 따른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활동지원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업무 범위의 것이다. 때문에 지원인력은 만성적인 정서적 불안과 긴장 상태에 놓이며 높



은 책임성으로 업무 피로도가 높아 장기근속이 낮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당사자의 장애정도나 요구가 높을수록, 그것이 국가적 차원의 제도로 해결되지 못할수록 주거지원서비스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당사자의 옹호 특히,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입주민에 대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나 법적 권한 부재에 부딪히기도 하며 행정업무를 포함하여 1인의 코디네이터가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외 입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과 이해가 낮거나 조절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의 어려움, 보호자와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표 IV-2〉 주거지원 서비스 현장에서의 어려움

구분	주요 응답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에 동의하고 입주하였으나 막상 입주 후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지원의 어려움. · 지원주택의 경우 본인명의 계약 주택으로 임대차보호법 우선, 즉시 퇴거 어려우며, 본인 동의 없으면 주택 방문 제한 · 자립생활주택은 임대료, 관리비, 주거환경 구축 등 주택에 모든 비용을 사업비로 지출하며 입주자가 주택에 가지는 권한이 몹시 작음. 주택 유지 관리에서의 동기부여가 낮고 주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주거공간 필요성이 우선시 될 것인지, 주거지원서비스 필요성이 우선시 될 것인지, 서비스 종료 및 거부가 주택 퇴거로 이어져야 하는지. · 보증금 및 월세 마련 부담 · 전월세일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주택개조 어려움 · 주택개조 비용 부담 · 매입임대주택의 한계로 노후주택이 많음. 잦은 수리, 접근성 떨어지는 주택 등. · 두 명 이상이 입주하여 살아갈 때 공과금, 전기, 에어컨 사용과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불일치, 장애정도나 장애유형이 다를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경증이 중증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 발생 등)
서비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입주민에 대한 지원(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서비스 등이 없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시간 부족, 중개기관 역할 부재, 서비스의 낮은 질 등으로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자체에 많은 품이 들어감. · 고령화, 노화, 중복장애 발현 등으로 집중케어가 필요할 때에 서비스 선택권 부재 ·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원만으로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구분	주요 응답
	<p>부족, 연계할 자원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지원자격이나 대상에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많음. 주거지원서비스 영역과 범위가 장애정도나 요구가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양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 내 가용 가능한 예산이 필요하나 별도 없음. 개인별 지원을 위한 타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 발생. · 정신과적 증상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주거서비스제공기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심야시간대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실종, 음주 후 경찰서에서 발견 등), 지원인력의 공백시간대 발생 문제의 대응 어려움. · 일상생활, 의사소통, 의사결정, 금전관리 등 자립생활 전반의 일정수준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 예를 들어, 공공후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한달 생활비를 며칠 만에 다 사용.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움. · 이성관계, 성에 대한 개입이 어려움.
지원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당사자가 24시간 365일 생활하는 집으로 정해진 운영시간이 없음. 코디네이터의 근무시간 외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처, 상담 등이 발생하여 주말, 심야 등 퇴근 이후 업무 연속이 비일비재함. 지원인력은 만성적인 정서적 불안과 긴장 상태. · 심야시간 지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 어려움(주 52시간 이내, 연장근로 주 12시간 이내 근로시간 맞추기 어려움). · 야간, 휴일, 주말 근무, 긴급상황 지원 등에 따른 수당지급체계가 없으며, 대체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휴가 발생되면 기존 시간의 서비스 공백이 또 발생함. ·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영역 외 응급 상황, 야간 지원 등 필요 발생 시 대응 어려움. ·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등이 있지만 자립 시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활동지원사 교체, 통장개설,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 신청 등 기관의 권한이 없어 한계에 부딪힘. · 활동지원사가 당사자의 욕구보다 개인 편의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발견되더라도 본인의 요청이 아니기에 교체할 수 없거나, 활동지원사가 이용자를 설득하여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개입이 어려움. 의료행위 선택/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도 권한 부재. · 주택에 상주하는 인력이 없어 활동지원사에게 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모니터링, 금전관리, 건강관리 등 필요 업무 요청. 활동지원사 업무가 과중되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처우에 비해 코디네이터의 업무범위가 넓고 상시적인 긴장감, 높은 책임성 등으로 업무 피로도가 높아 장기근속 떨어짐. · 행정업무를 간소화해야 함. 주거지원서비스는 1인이 행정, 프로그램, 사례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을 수행. (정신질환 및 알코올 여성노숙인 지원주택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입주 후 안정적인 주거유지를 위한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업무를 처리해야 함)



구분	주요 응답
기타(인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인의 자해, 타해 등 행동을 이웃주민에게 이해 구하는 것(기물파손, 도난사건 등으로 이웃주민 퇴거요구 빈번). · 장애인 입주 꺼리는 주민 인식 · 보호자와의 의견 불일치: 지원주택을 시설로 보는 경향.

2)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지향(질문 1번, 4번, 5번)

참여자들의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와 기존의 대표적인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거주시설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봄으로 써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지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단지 주거만이 아닌 자립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받으며 살아가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과 사회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 여기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지는 시설이나 시설형태의 주거형태가 아닌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행사되고 보장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지에 붙어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에게 따라가는 서비스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후 활동지원, 거주시설 등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 주로 다루어진다.

주거지원서비스가 활동지원서비스와 다른 이유는 서비스의 범위가 개인 활동의 단순 보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합의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일정한 계획 안에서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사례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개인이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중 코디네이터(담당자)가 아닌 ‘주거코치’는 활동지원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업무에서 큰 차별성이 없을 수는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와 기존 거주시설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자립적 삶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에 포용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주택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지니고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주택은 지역의 일반적인 형태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주거지

원서비스는 그러한 자립적 형태의 주거지에 사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로 주거지와 붙어 있는 패키지 형태가 아니라 분리 가능한 옵션 형태여야 한다.

참여자들은 대다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통합의 전제 아래 주거지원서비스에 당연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IV-3〉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지향

구분	주요 응답
개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나 병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 · 단지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 입주민 개인의 일상생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님. ·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가기 위함임 · 당사자가 자립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총체적인 서비스임. · 단순한 주거지 제공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적절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주택과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서비스임. · 장애인권리협약의 '자립적 생활' 과 '지역사회 포용' 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기본 제도의 의미. · 주거지원서비스는 보통의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전제조건. ·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에서의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 ·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지는 시설이나 시설형태의 주거형태가 아닌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적 주거형태를 전제함. · 주거지원서비스는 특정한 형태의 주택에 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님(주택에 따라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에게 따라가는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활동' 을 하도록 활동지원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개념. 주거지원서비스는 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신체-정신건강관리, 일상생활, 주거지 관리, 사회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하고 제공하는 개념. · 주거지원서비스는 직접적인 신체지원이나 가사지원 등이 아니라(이는 활동지원사를 통하여 하고),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례 지원 등을 수행함. · 주거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간의 차별성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주거지원서비스가 장애인 주택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오해할 수 있으며,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중 활동지원사와 유사한 주거코치와 혼동할 수 있음(주거코치는 활동지원사 업무와 큰 차별성을 가지지 않음). · 입주자 개별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진행, 지역관계망 형성,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



구분	주요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활동지원은 종합조사에 따른 적격자, 주거지원서비스는 자립적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활동지원은 신변처리, 목욕지원, 외출동행 등 기본 일상생활 영위 목적, 주거지원은 주거지 중심의 기본 지역사회 생활 사례지원 체계를 의미. · 주거지원서비스는 당사자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데에 초점. · 주거지원서비스는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직접적인 도움,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거주시설과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의 반영이 서비스의 초점. · 24시간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실무자가 당사자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 · 당사자가 '집' 이라고 느끼는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 2~3인이 한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1인 1실의 본인 공간을 갖는 것. · 프로그램 참여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 · 이웃, 지역과의 관계 확장이 있는 것. · 주거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자립' 중심 서비스이며, 개인별 주택에 의거한 주거 중심 서비스여야 함.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 집단생활의 거주시설서비스와 명확한 차이가 있음. · 기관이 아닌 당사자에게 집의 명의로 실질적인 주거권이 부여되며, 당사자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핵심적 차이. · (장애인 지위) 입소자에서 이용자로, (주거형태) 특정/격리/수용/집단/보호에서 보편/개방/포용/개별/자립생활로, (제공내용) 기본적인 생활지도 및 관리에서 온전한 지역사회 포용의 보장으로, (초점) 보호받는 생활에서 자립적 생활로, (권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주택통제) 공급자 통제에서 이용자 통제로, (주거지와 서비스와의 관계) 분리불가능(패키지 형태)에서 분리가능(옵션 형태)으로. · 장애인이 개인별 일반 주택을 제공받고,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 개인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주거서비스를 말함.

3)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질문 6번)

제시된 주거지원서비스 원칙의 안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특히,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한다는 점, 이용자 욕구와 자기결정의 강조,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것,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추가적인 제한(단주, 단약,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거지원서비스와 주택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서울시의 지원주택의 경우 입주민 모집 공고시에 이미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하도록 즉,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며 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하게 많아질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 행사도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직접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예: 긴급상황,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나 상황 확인 목적 등) 허용되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초지자체 등을 통해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인별 예산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표 IV-4〉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

- 이용자 욕구 및 자기결정 중심 서비스.
- 이용자가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이 되도록 지원
-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여부가 개인이 이용하는 활동지원 등 타 사회서비스의 제한이나 축소를 초래하지 않을 것
-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직접 지원 가능한 서비스 예산을 마련하고 있을 것
- 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독립공간을 보장할 것
-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이 아닌 당사자 중심 서비스일 것
- '서비스' 와 분리하여 주택을 생각하는 것은 고려 필요. 서비스 종결이 주택거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시 지원주택의 경우 모집공고 시에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으로 절차상의 검토 필요.
- 본인이 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려움. 향후 동일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기관이 존재할 경우 가능할 것.
-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이 직접 지원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함. 응급상황에서는 가능해야 함. 또한 직접 지원을 통해 중증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를 파악해야 할 수도 있음.
- 서비스 지원 시 단약, 단주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
- 입주자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독립생활 보장.
-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특정한 주거지에 특정 인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 없음. 본인의 주택 통제가 실제로 가능한 범위와 그 동의 안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유사시 기관이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자체와의 유연한 기금/예산을 사전에 설정하고 있을 것.

4)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3번)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초안으로 제시한 주거지원서비스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다만,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영역이 많을수록 사생활 침해나 보호 관리 영역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실제 주거지원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

〈표 IV-5〉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

- 전 영역 지원 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서비스들로 전반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
- 추가로 이용인에 대한 개별지원계획 수립 및 점검, 필요 서비스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용인의 욕구나 선호에 따른 개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공공기관 등)와 연계한 사례지원이 필요함.
- 금전관리, 활동보조, 건강관리, 응급대처, 권리인식, 가사관리, 이동하기, 성생활, 소득생계, 취업진로, 여가생활, 대인관계, 의사소통, 지지망 형성
- 건강영역 지원(정신건강관리, 신체건강관리), 생활영역지원(입주 및 퇴거, 주거유지관리, 주택시설관리, 일상생활관리, 개인위생관리, 가사관리, 금전관리), 사회적 영역 지원(가족관계, 대인관계, 지역사회커뮤니티연계, 학업 및 직업, 사회복지서비스, 인권 및 사회적 안전, 기타).
- 이용자에게 직접 개입되는 서비스 영역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생활 침해나 거주시설과 같은 보호 관리 영역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직접 개입보다 간접 개입 위주의 주택관리, 서비스 지원, 옹호 영역 정도로 수정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만이 아닌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하위영역 수정 필요.
- 건강지원 영역을 건강관리, 의료기관 이용, 응급의료지원으로 세분화.
- 서비스 선택, 초기정착, 주거관리,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관리 등 현재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의 포괄 필요.

5)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및 이용 절차(질문 7번, 8번)

참여자들은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자 범위를 모든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현재적 기준에서는 시설 퇴소 및 시설 입소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향후 정신장애인, 아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제외한 홍보, 모집, 초기 접수, 입주민 선정 및 배치, 기관 매칭 등 서비스 이용 흐름에서의 역할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책임성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관리감독 역할이 아니라 주택 확보 및 서비스 전달과정 전체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표 IV-6〉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및 이용 절차

구분	주요 응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노인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모두.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될 것임. 향후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입원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도 주요 대상. 시설입소를 고려하는 재가 장애인도 대상. 서비스 대상이 기본 모든 장애인이 될 수 있어야 함. 다만, 초점을 맞춰 밀착지원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탈시설장애인임. 아동에 대한 대책 별도 마련 필요. 시설 폐쇄에 따라 지역사회로 전환 및 정착 지원 필요한 장애인. 본인의 의사결정 확인이 당장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 또는 시설형태의 주거지에서의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생활 우선 지원 필요.
이용 절차 등에서의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및 안내)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성이 높도록 온/오프라인 방법 개발. 쉬운 정보제공.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기관 및 각종 복지기관에서 주거지원서비스 안내가 연간 반복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 (초기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다만, 발굴 및 의뢰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이 수행 가능. (입주민 선정) 수행기관 운영위원회(공무원 참여), 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 신청자의 주거지원서비스 필요도 심사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



구분	주요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홍보, 모집, 배치, 대기군 설정 및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 매칭 등 역할은 지자체 및 탈시설지원센터가 수행하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은 제공기관이 주관하여 탈시설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초지자체 공공사례관리 체계 등과 공동으로 진행 · 주택 입주 준비 절차에서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 담당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나 활동지원서비스 등금심사에서부터 물품구입 등 의견차이나 업무협조가 불안정. 이 준비과정의 체계화 필요. ·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지원 전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쉬운 자료 제공 및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 절차 간소화,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 · 지자체가 지도감독 역할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 · 주거지원서비스에 필요한 주택 확보의 책무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홍보, 초기상담 및 욕구사정,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 안내 및 연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지원 및 질 관리. · 주거서비스제공기관 : 심층상담 및 서비스 욕구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실행, 퇴거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6) 주거지원서비스 인력(배치기준, 질, 자격 등)(질문 9번, 10번)

현재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각 지역별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고 있는 인력의 체계는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현재 인력배치 기준이 1인의 코디네이터가 2명~4명 정도의 장애인 입주민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하는 편이며, 일정하게 코디네이터 숫자에 따라 별도의 슈퍼바이저 및 실무 총괄자 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자립생활주택의 경우 '퇴거자 사후 지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지원주택과는 달리 실제 주택에서 퇴거한 후에도 관련 지원을 담당할 수 밖에 없으나 배치기준에는 고려되지 않아 비가시화된 업무가 존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주거지원서비스를 기본적인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이해하고 있으나, 특수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탈시설, 인권, 의사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별도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 두기보다 보수교육과 의무교육을 공통되게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의견과 국가 차원의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양성과 관리 방안이 독립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 중요한 점으로

는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방식과 초점은 다르며 주거지원서비스가 지니는 업무의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상향된 처우를 마련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표 IV-7〉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구분	주요 응답
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사와 달리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은 서비스 인력의 역할 및 당사자 욕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야 함. ·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 특히 장애영역 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임(가령,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필수 배치). ·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은 주거지원서비스 형태에 따라 기준을 상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예: 상주 형태, 영양관리, 의료지원 등) · 서울 자립생활주택 인력배치 기준은 가형과 다형 주택기준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다형은 장애정도가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장애정도 보다는 주택의 야간 인력이 필요한지에 따라 추가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 · 슈퍼바이저 1 대 사례관리자 3, 사례관리자 1 대 입주자 4. · 제주도의 경우 입주인 2명당 1명의 코디네이터 배치, 코디네이터 5명당 1명의 슈퍼바이저 배치. · 자립생활주택의 경우 퇴거자 사후관리도 업무에 포함되나 인력 배치 기준에는 고려되지 않음. · 서울시 지원주택은 1개 서비스 제공기관당 20개 이상의 지원주택 운영을 적정 수준으로 간주하며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이외 실무 총괄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주거코치와 같은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코디네이터 1명이 4명~6명 지원, 주거코치 1명이 2명에서 5명 정도 지원 슈퍼바이저 1명이 코디네이터 4명 담당, 실무총괄자 1명이 슈퍼바이저 2~3명 담당) · 대구 남구는 2.5가구 당 1명, 즉 2~3명 당 1명의 코디네이터가 지원하고 있음. · 대구시 자립생활주택은 입주자 2명당 1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치. 별도 운영인력 및 관리인력, 슈퍼바이저 인력 부재, 사회서비스가 개인별 필요만큼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례관리 역할의 코디가 이용자 2인당 1명 기본 필요. · 지원인력 1명당 장애인 2~4명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따라 유연해져야 함. · 정신질환 및 여성 노숙인의 경우 7명 당 1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
인력 개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사항에 특수교사 자격도 포함 필요. · 장애의 사회적 이해에 대한 교육, 의료적 기능적 이해를 넘어 사회적 관계적 장애 이해 필요. · 다양한 역할 수행능력(프로그램 진행자, 조력자, 정보제공자, 권익옹호자, 상담가 등)



구분	주요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감수성 ·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 필요(최소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등) · 전문가(실무자) 인력과 동료지원가(당사자) 인력 구분 필요. · 별도의 교육과정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본 대상으로 두고 경력 정도로 슈퍼바이저 및 코디네이터 구분, 보수교육과정 운영. · 지자체 또는 중앙에서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내·외부적으로 직원교육 체계 필요, 보수교육, 의무교육. · 생소한 직무와 처우 낮음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음. · 최소 사회복지 이용시설 기준 적용 및 동일 처우 필요, 경력 및 전문성에 따른 인력 수급, 장기근속 유도 필요. · 국가 차원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수립 필요. · 사회복지사 및 관련학과 양성 내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내용 기본 포함 필요 · 서울시 지원주택의 경우 지원주택 인력은 단순 사례관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밀착지원을 해야 하는 인력으로 현재 적용 직급(4급)보다 최소 한 단계 이상 상향 필요. · 기관 중심의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당사자 중심, 주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탈시설, 인권, 의사소통 등 다양한 분야 경력 인정 필요, 또한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및 현장 실습 과정 마련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의 선임 사회복지사(3급) 이상이어야 함. · 타 기관 종사자들과 임금 격차 느끼지 않도록 단일임금 보장 필요.

7) 기존 인프라(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의 활용방안(질문 11번, 12번)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기존 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하거나 염려하였다. 그 이유로는 거주시설의 구조를 활용할 수 없으며, 거주시설이 지녀온 문화에서 종사자들이 자유롭지 않아 명칭이 바뀌더라도 서비스의 태도와 질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있었다. 따라서 고용전환 등을 이유로 변경될 수 있다하더라도 시설폐지 등을 단서로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원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지원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서비스와 주택이

상호 분리되는 개념인지 하나로 결합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념적 혼동이 있었다. 또한, 자립생활주택을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본인 통제를 강화하는 지원주택 방향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자립생활센터가 전통적으로 제공한 1개월의 단기체험은 주거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주거가 제공되는 프로그램 형태로 자립생활센터의 별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IV-8〉 기존 인프라의 활용방안

- 탈시설의 문제는 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 거주시설에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기존 거주시설 지원구조와 다른 점이 없음. 거주시설의 기능전환에 반대.
- 무조건적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기능전환보다는 시설종사자가 상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원하는 경우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기관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방향에 익숙한 종사자가 주거지원서비스 철학에 맞게 일할 수 있을지, 명칭 및 용도 변경 만으로 탈시설화 방향이 이룩되는 것인지 우려.
-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매뉴얼, 업무 표준화 필요.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거주시설의 개편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다루어져서는 곤란.
- 거주시설은 이름만 바뀌는 것 뿐, 기능적인 면에서는 변하는 것이 없을 수 있음.
- 기본 반대. 그럼에도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시설폐지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와 교육, 훈련 등 과정을 거쳐 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선정하여 고용전환을 지자체가 책임질 필요. 특수기능직(재활치료, 영양사, 간호사)의 경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지역 내 재가 장애인의 지원 인력으로 전환 지원.
- 기본적으로 반대하나, 해야 한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여겨지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이 될지 염려.
- 거주시설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다만,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기능전환이 시설 소규모화 정책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서비스지원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짐.
- 명칭 및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긍정적. 그러나 당사자의 주거 확보와 이용에서의 주체적인 권리 보장 필요.
- 차별화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기준과 분류 마련이 필요함.
-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로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주거공간과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더불어 질적 확대도 필요함.
- 시설퇴소 장애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전문요양주택, 집중돌봄주택, 지원주택, 자립주택, 단기지원주택, 생활주택 등 돌봄의 경중, 서비스 차별 등에 따라 주거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기존 인프라를 편입시킬 필요.
- 자립생활주택에서 체험기간 이후 결국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으로 자립해야 하는데 시설 퇴소 직후 주거지가 안정적으로 마련된다면 지원주택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의 제한과 주거지원서비스 운영기관을 위한 서울



시 예산 확보 어려움이 있음.

- 자립생활주택은 지원주택 입주 전의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가장 마지막 주거 형태는 지원주택.
- 현재 자립생활주택은 전반적으로 지원주택의 철학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예: 주택 명의 권한). 점진적으로 지원주택으로 용도 전환. 희망 입주자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폐지 등. 그러나 1개월 정도 단기간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서비스(단기체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립생활센터의 기본 역할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 자립생활센터가 정부 차원의 유일한 탈시설 지원 민간 기관이기 때문. 이를 위한 예산 및 권한 필요.

8) 주거지원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기타(질문 13번, 14번)

참여자들은 기타 의견으로 주거지원서비스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성적 평가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며,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표준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거지원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용어의 통일과 유연한 예산체계 및 개인예산제 도입, 거주시설의 전환에 대한 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표 IV-9〉 주거지원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기타

- 정량평가 지양. 형식적 평가 지양. 이용자의 삶에 집중하는 평가 체계 필요(현장방문, 심층면담 등).
- 주거지원서비스 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종사자 대상 정기 역량강화 교육.
- 서류 간소화 필요.
- 주거지원서비스 질 품질 관리 필요.
-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긍정적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
- 제공기관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간지원조직 역할도 중요.
- 주거지원서비스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되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개인예산제 도입 등 관련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함.
- 기존 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방안 모색.
- '주거서비스', '주거유지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전국 단위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용어 통일 필요.
- 현재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그룹홈 등 주택 명의 및 기능, 입주기간 등 자립생활 주거정책과 주거지원서비스 정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여네될 수 있도록 고려 필요.
-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고려 필요.
- 지역별로, 장애정도별로, 개인의 욕구에 따라 주거지원서비스나 정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매우 천차만별. 따라서 기본 서비스 구조는 있되 매우 유연해 질 수 있는 특별한 행정적 안전망 필요. 가령, 지자체나 탈시설지원센터에 별도 기금을 마련하여 관련 입주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배제 불가피.

·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음. 촘촘한 주거지원서비스 필요.

3. 시사점

이상의 전문가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자립적 삶과 지역사회 포용을 위한 별도의 주거지원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강조해 오고 있으나 그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으며, 관련 서비스는 주택과 사회서비스가 각각 분리되어 설계되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총체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간주되어 온 많은 장애인의 주거지원 기능은 단순 주택제공으로만은 해결되지 못했으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장애인거주시설 혹은 지역사회 내의 특정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발달해 온 제도는 장애인을 향한 분리와 배제, 차별적인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일반적인 주택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목표하는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을 위한 국가 책임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

둘째, 주거지원서비스의 취지에 맞는 원칙을 설정하여야 개념상 혼란을 줄이고 현재의 여러 인프라를 목적에 맞게 재개념화할 수 있다. 현재 주거지원서비스는 개념 통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그와 유사한 서비스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이루어져 옴에 따라 두 가지 큰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의 의미에 관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 개인이 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에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와 관계된 것이다. 흔히 몇몇 지자체의 자립생활주택, 또는 서울시의 지원주택을 사례로 주거지원서비스가 탈시설과 연계되어 국내에 소개되고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시범적 성격과 지자체에서



의 실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주택 제공이 곧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이 곧 지금의 거주시설이 지니는 기본 원리(입소하면 서비스 제공, 퇴소하면 서비스 단절)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 되도록 만들고 있다. 지원주택은 개념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계약이나, 본인이 서비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요구를 계속 단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사자와 운영기관 모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거주시설과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비교하며 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을 탐색한 결과 주거지원서비스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자립적 생활'과 장애 특정 분리를 지양하는 '지역사회 포용'이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 아래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주택 및 지역사회 기본 생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지는 기존의 시설 또는 시설 형태의 주거형태가 아닌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적 주거형태(예: 본인이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지닌 개인별 주택)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하며,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의 시설 또는 시설 형태의 주거형태를 탈피하며, 동시에 가족과 동거하며 부양의무가 개인단위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간의 관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자립적 주거형태라는 의미가, 주거지원서비스가 특정한 형태의 주택에 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에 관한 권한과 서비스에 관한 권한은 별도의 것으로 모두 장애인 개인에게 속한 것이며, 이 둘이 모두 결합 되어 장애인에게 속해 있는 주택을 '지원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은 서비스가 주택에 묶여 시설과 같이 패키지 형태로 장애인에게 제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이 주택과 서비스에 모두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권리협약과 반하는 지원주택 또는 유사 시설의 형태가 주거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발생하여 특정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연결하는 의무적 패키지 솔루션으로 제공되거나, 그 결과 두 명 이상의 동거를 요구하거나 특수한 주거 형태 내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 현재의 여러 인프라는 다음과 같은 주거지원서비스 원칙을 그 방향으로 점점·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IV-10〉 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안)

- ① 주거지원서비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른 자립적 삶과 지역사회 포용을 목표한다.
- ② 주거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보편적인 형태의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 제공된다. 주택은 민간과 공공 모두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장애인 개인이 법적인 통제 권한을 지니는 형태여야 한다.
- ③ 주거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받아 이용한다.
- ④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은 당사자와 그 가족, 공공후견인, 지자체 사례관리자,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담당자에 의한 계약 또는 국가기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⑤ 주거지원서비스의 종로여부가 장애인의 주택에서의 퇴거를 결정하지 않는다.
- ⑥ 장애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당할 위험 없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⑦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의 설계 및 필요도 판단, 위기상황 대응 등의 이유가 아닌 한 가능한 직접적인 신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 ⑧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개인별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구축하고 있다.
- ⑨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여부가 장애인 개인의 다른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약이나 제한, 축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장애인 서비스는 특정 거주시설이 아닌 우선적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을 통한 일상생활 영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된다. 영역별 하위영역에 따른 세부내용은 현재의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의 목적과 초점을 두는 기능에 따라 다소 상이하여 별도의 연구를 통해 범주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본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 및 기준들은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거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당장은 탈시설 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국내의 흐름을 고려하여 좁은 의미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이 기본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시설이나 병원 외 적정한 서비스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절하게 입소·입원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럴 우려가 있는 대기 장애인(재가 장애인)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적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종합조사나 별도 적격자 선정체계에 따라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발달장애인



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거지원서비스 이용 대기군이 설정되면 자립적 주거형태의 제공 즉 주택 공급 방안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함께 찾아야 한다. 주택은 당사자나 가족,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에서 공급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해당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입주한 장애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서비스의 연결을 받게 되며 기본적인 수준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사례지원을 받게 된다. 그 대상의 연령제한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을 것이나 우선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기준과 같이 만 18세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 정책은 별도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이 65세 이상자에 대한 연령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연령은 물론 장애정도와 유형 등에 있어서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중증의 장애인과 복합적인 지원의 요구를 가진 장애인 일수록 서비스에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거지원서비스는 고도의 역동적이고 전문화된 사회복지 업무이며 체계화된 인력배치 기준과 자격 관리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주거지원서비스는 예측가능한 특정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전달 업무가 아니라 역동적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예측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두고 지원하는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이용기간, 시간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삶의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관리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업무 피로도와 긴장감,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과 동시에 그 업무가 지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체계화된 운영기관 지원, 인력배치 기준, 자격 관리 기준, 관련 교육 제공, 정성적 평가체계 등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와 연동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 존재하듯,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서비스 기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과 철학, 지원 방식과 그 범위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여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

게는 기존의 거주시설이 소규모화를 벗어나는 형태일 것인가, 즉 시설의 폐지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기준점이 제시되어야 하며, 시설환경에 익숙한 종사자의 근무 문화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전환과정에서 기존 시설과 시설 문화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지원서비스는 또 다른 시설화된 서비스의 한 유형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의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보다 당사자의 주택 및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 주거지원서비스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착 목적의 주거서비스라기보다는 '제도 체험 + 정보제공'에 가까운 단기 자립생활체험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일곱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서비스 전반의 주관자가 되어야 하며, 입주민 개인별 지원예산을 별도로 구축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다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전달과정이 국가의 명확한 목표와 책임성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전달체계의 이해에 따라 서비스의 철학과 원칙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어려움으로 서비스 장벽이 생겨나 배제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제공 단계별 역할을 분명히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기타 복지기관 간의 원만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는 입주민에 대한 기본 책임을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이나 그에 맡긴 가족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지자체 사례관리 체계,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하여 각 입주민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V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정부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될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기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현장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현장 설문조사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 서울시그롭홈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의 지역사회전환서비스지원센터(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등의 협조로 전국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수행기관 종사자 모집 공고를 기관 또는 협회 이메일로 보내 연구 참여 홍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주거지원 관련 협회에서 공지한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본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홍보하였고, 전국의 탈시설 또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내용

설문지는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및 기준에 대해 물어보았다. 2021년 충청북지관에서 수행한 “성인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크리스트 연구”(오단이 외, 2021)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선행연구 검토, 내부 연구진 회의, 외부 기관의 주거서비스 제공 내용,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반영하여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및 기준을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자의 일반적인 현황, 현 기관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및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한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질문문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1〉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문항
종사자의 일반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작성자명 - 기관 소재지 - 기관 근무 경력
주거지원서비스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서비스의 목적 - 주거지원서비스의 제도화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설계 우선 대상자 - 서비스의 양 - 주택이용권한자 - 당사자의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선택권 - 서비스 이용 장소 - 서비스의 형태 - 품질관리기준의 필요성 - 거주시설 전환 - 양성체계 - 제공인력의 처우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전 안내 및 연계(서비스 안내 및 홍보, 이용자 초기 인터뷰, 개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계약 및 변경) - 주거(주택)이해, 주거지 선택 및 계약, 이사, 주거관리 및 유지) - 지역사회생활(자기관리, 가사관리, 개인안전, 금전관리, 돌봄서비스, 보조기기) - 사회참여(쇼핑, 교통수단 활용, 여가활동, 지역사회 활동, 취업 및 진로, 교육) - 건강지원(건강관리, 의료/재활 관련 기관 연계, 응급의료지원) - 옹호활동(선택 및 자기옹호, 의사소통, 성생활) - 인식개선(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 기타 서비스 지원

4.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현장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총 156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2명이 연구에 동의하지 않아 설문을 종료하였다.

1) 종사자 현황

연구참여에 동의한 154명 중 11명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경력이 6개월 미만이라 설문을 종료하였다. 최종적으로 143명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는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그룹이었으며,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종사자도 29.9%를 보였다. 응답을 보면 현장에서 오랫동안 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2〉 근무 지역

근무기간	응답자 수(명)	비율(%)	비고
6개월 미만	11	7.1	설문종료
6개월 이상 2년 미만	58	37.7	
2년 이상 5년 미만	39	35.3	
5년 이상	46	29.9	
합계	154	100	

17개의 관할지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곳은 서울 84명(58.74%)이며,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지속적으로 탈시설을 지원하며 지원주택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광역시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지역으로 해당 사업 종사자들이 본 설문에 다수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V-3〉 근무 지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서울특별시	84	58.7
경기도	9	6.3
인천광역시	5	3.5
강원도	1	0.7
대전광역시	2	1.4
세종특별시	1	0.7
충청북도	2	1.40
충청남도	—	—
부산광역시	2	1.40
대구광역시	7	4.90
울산광역시	2	1.40
경상북도	—	—
경상남도	3	2.10
광주광역시	2	1.40
전라북도	—	—
전라남도	3	2.10
제주특별자치도	20	13.99
합계	143	100

2) 주거지원서비스에 관련한 인식

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 지는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를 가정하여 주거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대상자를 정하고,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문항은 총 15개의 문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문의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5개로 나뉘며, 주거지원서비스의 철학, 개념, 지향에 대한 인식(1~3번 문항),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과 기본 대상자에 대한 인식(4~6번 문항),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주택중심)에 대한 인식(7~9번 문항), 주거지원서비스를 위한 공적 체계의 역할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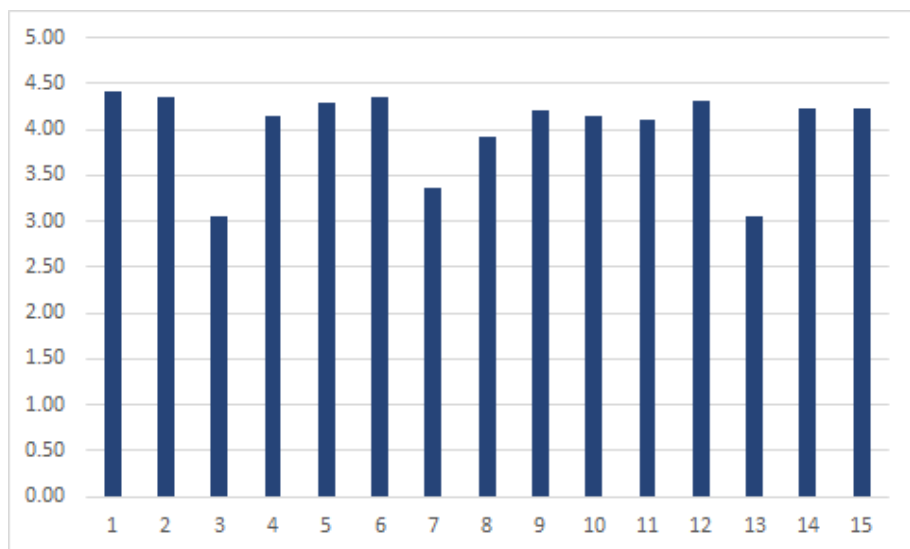
인식(10~12번 문항), 기타 기능전환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13~15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4〉 주거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인식

순 번	문항	1	2	3	4	5	평균	표준 편차
1	주거지원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포용(사회통합)에 있다	1	—	9	63	70	4.41	0.45
2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내 생활 유지를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 외에 별도 주거지원서비스 제도가 필요하다	—	2	8	70	63	4.36	0.43
3	주거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전혀 다른 배타적 서비스이다.(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7	37	31	37	21	3.06	1.58
4	주거지원서비스는 장애유형 및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접근·이용 가능해야 한다	—	11	12	66	54	4.14	0.75
5	주거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2	14	68	59	4.29	0.48
6	주거지원서비스의 양은 장애유형 및 정도, 필요 수준, 해당 지역의 서비스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상향될 수 있어야 한다.	1	—	6	75	61	4.36	0.40
7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주택 이용에 대한 권한(예: 입소 및 퇴소 조치의 권한)을 지녀야 한다.	12	23	32	54	22	3.36	1.36
8	장애인 당사자(이용자)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선택권을 지녀야 한다.	2	6	32	65	38	3.92	0.78
9	주거지원서비스는 특정 형태의 시설(또는 주택유형)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안정된 주거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2	14	74	52	4.22	0.53
10	주거지원서비스의 희망자에게 시설 혹은 가정 보호가 아닌 독립적인 주거지(1인 거주, 동료 동거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	3	13	88	39	4.14	0.43



순 번	문항	1	2	3	4	5	평균	표준 편차
11	주거지원서비스 희망자의 신청 접수, 선정, 제공기관 배치·변경 등에 관한 역할은 공적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5	16	77	44	4.10	0.61
12	주거지원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	2	9	74	58	4.31	0.43
13	장애인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역할 할 수 있다.	19	32	24	57	11	3.06	1.46
14	주거지원서비스 전문인력의 배출을 위한 양성체계가 필요하다.	—	4	11	75	53	4.24	0.50
15	주거지원서비스 전문인력의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혹은 그 이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2	17	71	53	4.22	0.50



[그림 V-1] 주거지원서비스 인식 결과 평균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에 체크 하였으나, 3번 문항인 ‘주거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전혀 다른 배타적 서비스이다.(활동지

원서비스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7번 문항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주택 이용에 대한 권한(예: 입소 및 퇴소 조치의 권한)을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13번 문항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역할 할 수 있다.'에서는 다른 문항과는 달리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3번 문항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며, 7번과 13번 문항은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방식이나 형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이 되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

향후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외부 기관의 주거서비스 현황과 현장전문가의 의견,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정해진 주거지원서비스의 지원 영역(안)에서 해당 영역 및 하위영역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총 8개의 영역과 그에 따른 하위영역들에 대한 적절성을 물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를 추가하였다. 예시는 부록 2에 작성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5〉 주거지원서비스 기준의 적절성

구분	문항	1	2	3	4	5	평균	표준 편차
영역 1	입주 전 안내 및 연계	2	2	31	84	24	3.88	0.55
1-1	서비스 안내 및 홍보	2	3	27	84	27	3.92	0.58
1-2	이용자 초기 인터뷰	—	3	19	89	32	4.05	0.44
1-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1	5	26	83	28	3.92	0.57
1-4	서비스 계약 및 변경	—	2	24	89	28	4.00	0.42
영역 2	주거	1	1	30	79	32	3.98	0.52
2-1	주택이해	1	3	26	82	31	3.97	0.54
2-2	주거지 선택 및 계약	2	1	22	85	33	4.02	0.54
2-3	이사	2	1	29	79	32	3.97	0.58



구분	문항	1	2	3	4	5	평균	표준 편차
2-4	주택관리 및 유지	-	3	26	89	25	3.95	0.44
영역 3	지역사회 생활	-	2	34	85	22	3.89	0.44
3-1	자기관리	-	4	33	79	27	3.90	0.52
3-2	가사관리	1	2	27	85	28	3.96	0.50
3-3	개인안전	-	2	28	80	33	4.01	0.48
3-4	금전관리/경제관리	-	5	30	77	31	3.94	0.56
3-5	돌봄서비스	-	4	28	80	31	3.97	0.52
3-6	보조기기	-	3	31	81	28	3.94	0.49
영역 4	사회참여	-	2	33	79	29	3.94	0.49
4-1	쇼핑	-	6	30	84	23	3.87	0.52
4-2	교통수단 활용	-	5	29	79	30	3.94	0.55
4-3	여가활동	-	3	28	87	25	3.94	0.45
4-4	지역사회 활동	1	2	29	81	30	3.96	0.53
4-5	취업 및 진로, 교육	-	5	26	85	27	3.94	0.51
영역 5	건강지원	-	2	26	82	33	4.02	0.47
5-1	건강관리	-	2	29	83	29	3.97	0.46
5-2	의료/재활기관 연계	-	2	20	88	33	4.06	0.42
5-3	응급의료 지원	-	2	26	86	29	3.99	0.44
영역 6	옹호활동	-	-	29	82	32	4.02	0.43
6-1	선택 및 자기옹호	-	1	24	87	31	4.03	0.41
6-2	의사소통	-	3	28	81	31	3.98	0.50
6-3	성생활	-	9	26	79	29	3.90	0.63
영역 7	인식개선	-	3	32	80	28	3.93	0.50
7-1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	5	32	78	28	3.90	0.55
영역 8	기타 서비스 지원	-	1	26	86	30	4.01	0.42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적절하다’ 혹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영역 중 가장 높은 적절하지 않다(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의 의견을 받은 항목은 ‘영역 1(입주 전 안내 및 연계)’ 항목으로, 2.79%가 해당 영역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에 대한 이유로, ‘공급형 지원주택의

경우 주거영역, 입주 전 체계에 대한 지원이 주거유지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는 기존 자립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내 거주기간이 정해져있고, 거주기간 이후에는 외부에 새로운 주거지를 탐색하는 ‘주거안정성 영역(주거의 물리적 측면 강조)’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만, 현재 서울특별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급형 지원주택을 통한 서비스제공과 차이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향후 장애인 주거지원의 개념과 범위의 정립이 확실하게 된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적절하지 않다(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 의견을 받은 하위영역은 ‘영역 6(옹호활동)’ 내의 ‘성생활’이었으며, ‘성에 대한 이해(연애 및 성생활, 자위행위 등), 피임방법 등 안내, 동의/거절/도움 청하기, 피해를 받았을 때 방법 안내’와 같은 예시를 설문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6.29%가 해당 영역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견으로 ‘성생활이 옹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성생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등과 같은 의견이 나타났다. 해당 영역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당 내용에 관하여 복지관 등 외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여 많은 종사자들이 해당 하위영역을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며,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인 기타 의견으로는 ‘정기적 심리상담/동료상담 등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비롯하여,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벗 등 혹은 동료상담 등 연계’, ‘주거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교육 필요’, ‘전문적인 부분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혹은 전문 종사자 필요’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이 되려면 충분한 활동지원시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의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며, 정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확충 및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등을 ‘종사자 대상의 설문 뿐만 아닌, 직접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하여 의견을 받아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었다는 의견



이 다수였고, 향후 개발된 주거지원서비스는 시설과 같이 프로그램화 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상황 등을 경계하며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지원을 통하여 당사자의 선택권을 최우선시 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 8)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장애인 자신이 살아갈 개별적인 주거공간인 집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로드맵에 의하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22년부터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장애인에게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지서비스가 합쳐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주택 형태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목적, 영역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고, 국내·외 주거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국의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그룹홈 등 현장방문을 통해 주거지원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취약계층의 주거주거지원서비스 관련 학계 전문가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개별면접, 집단면접, 서면의견 조사 등을 통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활동지원서비스 간의 차별성, 거주시설 서비스와의 차이점, 기본 원칙, 신청 절차, 인력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철학과 원칙, 지침 등에 대한 동의 여부와 주거서비스 기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다.

첫째,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은 장애유형과 연령대 및 욕구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성과 주거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범위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우선, 주거안정성의 영역으로 지역의 주거를 기반으로 주택의 입지선정, 주거비 지원,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은 주거편의성 영역으로 장



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 및 일상생활과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각종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둘째,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영역은 상기에서 언급한 주거안정성과 주거 편의성을 장애인이 개별 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지원되는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면 입주 전 안내 및 연계, 주거, 지역사회 생활, 사회참여, 건강지원, 옹호활동, 인식개선, 기타 서비스 지원으로 총 8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적절한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서면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과 기준을 아래의 표와 같이 최종 결정하였다.

〈표 VI-1〉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 개요

<p>1. 입주 전 안내 및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 서비스 안내 및 홍보 ■ 기준 2: 이용자 초기 인터뷰 ■ 기준 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기준 4: 서비스 계약 및 변경 <p>2. 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5: 주택 이해 ■ 기준 6: 주거지 선택 및 계약 ■ 기준 7: 이사 ■ 기준 8: 주거관리 및 유지 <p>3. 지역사회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9: 자기관리 ■ 기준 10: 가사관리 ■ 기준 11: 개인안전 ■ 기준 12: 금전관리(경제관리) ■ 기준 13: 돌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 ■ 기준 14: 보조기기 	<p>4. 사회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5: 쇼핑 ■ 기준 16: 교통수단 활용 ■ 기준 17: 여가활동 ■ 기준 18: 지역사회 활동 ■ 기준 19: 취업 및 진로, 교육 <p>5. 건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0: 건강관리 ■ 기준 21: 의료/재활 관련 기관 연계 ■ 기준 22: 야간 등 긴급사항 <p>6. 옹호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3: 선택 및 자기옹호 ■ 기준 24: 의사소통 ■ 기준 25: 성생활 <p>7. 인식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6: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p>8. 기타 서비스 지원</p>
---	---

〈영역 1. 입주 전 안내 및 연계〉

기준 1: 서비스 안내 및 홍보

원칙: 예비 입주자는 주택의 선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받는다.

- 1.1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주택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상세히 설명 또는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1.2 예비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이 없을 시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칭)등에 연계하여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등 연계

기준 2: 이용자 초기 인터뷰

원칙: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예비 입주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 2.1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비 입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해야한다.
- 2.2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 및 자기결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정보 파악(장애정보, 선호도 등)
- 초기인터뷰를 통한 이용자의 욕구 파악



- 주거지원서비스 상담

기준 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원칙: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가능한 제도 등을 연계한다.

3.1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개인별 직접 지원하고, 필요 시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 가능한 제도 및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연계(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보조기기 신청 등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가능한 정보 및 지역사회 내 연계 가능한 서비스 연계)

기준 4: 서비스 계약 및 변경

원칙: 주거지원서비스는 특정 형태의 시설 또는 주택이 아닌 장애인 개인 명의의 소유 또는 점유한 주택에 제공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약속과 조건에 대한 문서로 된 계약을 맺고, 각각 한부씩 나누어 가진다.

4.1 계약서에는 서비스의 원칙, 서비스변경에 대한 고지, 필요시 타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 안내(서비스설명서 배부)
- 이용계약서 작성 및 보관
- 서비스 변경 안내(기관/직원 변경)
- 타 서비스제공 기관과의 연계(이용자 관련 서류 공유 등)

〈영역 2. 주거〉

기준 5: 주택 이해

원칙: 이용자는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필요시 주거상담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주거지원서비스의 종결여부가 주택에서의 퇴거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5.1 이용자는 다양한 주택의 종류와 유형, 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주택의 종류 및 유형 확인
- 주택 계약의 이해
- 주거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상담
-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안내 등

기준 6: 주거지 선택 및 계약

원칙: 본인의 주택 내 제공되는 서비스를 원칙으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거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6.1 주거지 및 동거인 선택과 계약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주거지 탐색 및 선택
- 부동산 활용 및 연계
- 동거여부 및 동거인 선택(단, 1인 주거가 원칙이며, 동거예정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 주택 계약에 대한 지원



기준 7: 이사

원칙: 이용자는 자기결정에 의해 자신 선택한 주택으로의 이사를 위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7.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해야 한다.

- 이삿짐센터 연계
- 전기, 가스, 수도, TV 등 개통
- 전입신고

기준 8: 주거관리 및 유지

원칙: 이용자는 필요시 주거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8.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생활 형태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시 해당 업체를 탐색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파손, 리모델링, 벽지공사 등 관리
- 가전제품 사용 및 관리
- 습기와 곰팡이, 해충, 위생상태, 식품안전,
- 배수, 상수도, 냉난방 환경 관리
- 채광과 환기
- 취사와 쓰레기, 분리수거
- 납성분 페인트 확인
- 방염, 방역소독
- 가스 개량기, 보일러 상태 점검

- 장애유형 및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주택개조 지원
- 기관 연계 및 활용

〈영역 3. 지역사회 생활〉

기준 9: 자기관리

원칙: 이용자는 적절한 자기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9.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개인 위생관리
- 개인 소독 및 예방
- 이미지 메이킹

기준 10: 가사관리

원칙: 이용자는 적절한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0.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수납정리
- 의복관리 및 세탁
- 음식물 조리 및 관리
- 조리 및 주방용품 관리
- 청소 및 분리수거
- 가전제품 사용 및 관리
- 냉난방기 관리 및 사용



기준 11: 개인안전

원칙: 이용자는 주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지원받는다.

11.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인지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인지, 예방, 대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1.2 예상되는 위험은 이용상담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개인 안전을 위해서 이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계획에 기록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 외출 시 점검(가스 및 전기 등)
- 조리도구(식칼 등) 및 화기 관리
- 재난시 대처방안(소화기 사용 등)
- 긴급상황시신고처(경찰서, 소방서)
- 응급의료상황 대처

기준 12: 금전관리(경제관리)

원칙: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금전을 사용한다.

12.1 이용자는 자신의 금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과금 및 임대료 납부
- 생활비 등 금전관리
- 은행업무(신탁업무)

기준 13: 돌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

원칙: 이용자는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지닌 활동지원서비스 등 개인별 지원서비스의 급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활동지원서비스 등 개인별 지원서비스의 적절한 필요량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13.1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외부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돌봄서비스 신청 및 계약
-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한 일상생활 지원

기준 14: 보조기기

원칙: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와 설비에 대한 사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14.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개별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 및 관리와 수리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 보조기기 사용 및 관리, 수리법 안내

〈영역 4. 사회참여〉

기준 15: 쇼핑

원칙: 이용자는 자신의 원하는 물건을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 구입한다.

15.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적절한 물건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생필품 구입 및 비용 지불

기준 16: 교통수단 활용

원칙: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언제든지 이동한다.

16.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주요 방문장소(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교회 등)에 대한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 사용
- 기차, 비행기, 시외버스 등 필요시 사용

기준 17: 여가활동

원칙: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여가활동을 한다.

17.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주택 내·외에서 적절한 여가활동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여가활동 탐색, 계획, 실행

기준 18: 지역사회 활동

원칙: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지역사회 활동을 한다.

18.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여가활동 탐색, 계획, 실행
- 낮활동 기관 이용
- 의사소통 및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 지역사회 내 주민들과 관계 형성

기준 19: 취업 및 진로, 교육

원칙: 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

19.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일자리, 교육 등을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 연계하여야 한다.

- 진로 고민 및 탐색
- 취업관련 정보 확인 및 지원
- 평생교육기관 활용
- 직장생활

〈영역 5. 건강지원〉

기준 20: 건강관리

원칙: 이용자는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20.1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다.

- 규칙적인 건강관리(복약 및 운동 등)
- 건강검진 및 상담



기준 21: 의료/재활 관련 기관 연계

원칙: 이용자는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다.

21.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시 지역사회 내 건강관련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재활관련 기관 연계 및 이용
- 현재 건강수준에 대한 파악
- 건강상태 표현 및 병원, 약국 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활용한 방문케어 연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과약물 정보수집 및 지원

기준 22: 야간 등 긴급사항

원칙: 이용자는 야간 등 긴급 상황에 적절히 지원을 받는다.

22.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갑작스런 질병 및 건강이상으로 인한 응급상황 대응(입원 등)
- 소방서 안전점검, 경찰서(또는 파출소) 등 연계

〈영역 6. 옹호활동〉

기준 23: 선택 및 자기옹호

원칙: 이용자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옹호한다.

23.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자기결정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기의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자기 의사에 의한 선택 및 책임
- 공공후견인 제도 탐색 및 연계
- 자기 의사 표현
- 타인과의 관계
- 자조모임 형성 및 활용
- 장애인 차별 이해 및 대처법
- 사기예방, 피해 대처(보이스피싱, 결제사기 등)

기준 24: 의사소통

원칙: 이용자는 적절한 의사소통지원에 따라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갖는다.

24.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유형에 맞는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시 유관 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 의사소통 표현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AAC) 활용
- 읽기 쉬운 자료 제작 및 제공
- 의사소통 관련 기관 연계(읽기쉬운자료 제공기관, AAC 제공기관, 언어치료 기관 등)



기준 25: 성생활

원칙: 이용자의 성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 받는다.

25.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성생활을 존중하고, 자연스런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성에 대한 이해(연애 및 성생활, 자위행위 등)
- 피임방법 등 안내
- 동의/거절/도움청하기
- 피해를 받았을 때 방법 안내

〈영역 7. 인식개선〉

기준 26: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원칙: 이용자가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에 노력한다.

26.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지역주민과의 민원 등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지역주민 민원 대응

〈영역 8. 기타 서비스 지원〉

원칙: 이용자는 필요시 기타 주거유지 및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7.1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필요와 생활에 따라 기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위 항목 외에 각종 서비스 지원(가족지원서비스, 대외활동 지원 등)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거기반의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은 현행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참고(김용득 외, 2018)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관련한 법적 근거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영역 및 기준들은 향후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의견조사 분석 결과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가 적절히 장애인에 제공되기 위해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의 범위와 이용절차,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서비스 질 관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과 예산근거가 필요하다. 현재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주해야만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2021년 4월 20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산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 주거지원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자원 혹은 기존 재원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원 없이 기존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에게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능 부여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사례관리자 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건강보험 영역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입주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다양하였다. 이에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가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 개별주택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자는 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을 지원하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기관리지원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갖추도록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별도의 위기대응을 위한 체계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질적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제공기관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진행한 전문가의견에 의하면,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역사회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험과 이론에서는 주택 제공 기관과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분리가 시설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호된다. 만약 주거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외부의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거지원서비스 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식에 대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지원서비스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입주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즉 지원주택을 위한 인력 자격 기준과 전문성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서울시와 같이 주거코디네이터와 주거코치가 일정한 장애인 인원 수 대비 지원인력 (1: 4, 1: 6)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하나의 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여러 기관을 통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적정 인력 배치는 추후 연구를 통해 제안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서비스의 광역단위의 중간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공급 및 수요 기획, 제반 운영 및 관리 총괄을 위한 지자체단위의 주체 설정, 즉 지원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주거지원서비스를 관리하는 광역단위의 중간조직에서는 입주자 사정(Assessment),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평가, 입주자 명부 관리, 지원주택사업의 정책 개발과 홍보 등 다양하고 정교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나 체계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정배, 조운화, 서해정, 박광옥, 채성현, 손희경(202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텔 구축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2021). 2021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관리운영지침.
- 국토연구원(2018).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방안연구, 미발행
- 김경미(2009).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경험과 변화에 대한 연
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1, 151-182.
- 김동화, 윤상용, 송아영(2020). 경상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 및 체계 구
축방안. 경북행복재단
- 김진우(2019).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 김용득, 김미옥, 변경의, 소진이(2009).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위
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혜승, 김태환(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소요 추정 연구. 국
토연구, 59, 223-245.
- 국토연구원(2010).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 국토연구원(2016).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 남기철, 김선미, 민소영, 홍인욱(2020). 케어안심주택 사례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
구. 보건복지부·동덕여자대학교
- 남영우(2019). OECD국가의 사회주택 공급분석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제
시. 대한부동산학회지, 37(4), 75-90.
- 박수경, 김보경, 박영주, 김지혜(2021).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근육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생활 가이드북 개발. 재활복지, 25(1), pp.65-90.
- 보건복지부(2019). 케어안심주택 운영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
- 보건복지부(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서수정(2017). “주거서비스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2019),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서울시정
신건강복지센터
- 오단이, 박정연, 채성현, 이선영, 이한결(2021). 성인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위한



- 주거지원서비스 체크리스트 연구. 충현복지관
- 오유라, 이승연, 이은지, 박슬기, 황사라, 손지훈(2018).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방향성 고찰-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8, 54-61.
- 이경락, 전병진, 황재영, 김정근, 변나향(2019).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적정모형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길임(2011). 르 꼬르뷔제의 임페블르-빌라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개념 연구. 대한 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2), 69-80.
- 이선우(200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이연숙, 김미희, 오찬옥, 이숙영, 최수현(1990). 언어적 표현을 통해 본 주거의 개념에 대한 탐구적 연구: 중산층 아파트 거주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 49-64.
- 장세훈(1999). “제3세계발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와 주거복지”.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연구제5호.
- 충현복지관(2019). 독립주거역량 체크리스트 개발보고서. 충현복지관
- 홍선미, 변경희, 하경희, 이선향(2014).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2018). Housing and disabled people: Britain's hidden crisis.
- HM Government(2011). Laying the Foundations: A Housing Strategy for England, UK.
- HM Government(2021).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UK
-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2021).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UK.
- Interagency Committee on Disability Research(2020). Federal Housign Resour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Toolkit for interagency cloolaboration, US.
- Shahrom, S., and Zainol, R.(2015). Universal design in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review. Journal of Design and Built Environment, 15(1), 33-42.
- Helander, E.(2000). The origins of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7-20. Retrieved from <http://einarhelander.com/origins-rehabilitation.pdf>
- Fange, A., and Iwarsson, S.(2005). Changes in ADL dependence and aspects of

- usability following housing adaptation—A longitudinal perspective. *Am. J. Occup. Ther.* 59, 296–304.
- Petersson, I., Lilja, M., Hammel, J. and Kottorp, A.(2008). Impact of home modification services on ability in everyday life for people ageing with disabilities. *J. Rehabil. Med.* 40, 253–260.
- Petersson, I., Kottorp, A., Bergstrom, J., and Lilja, M.(2009). Longitudinal changes in everyday life after home modifications for people aging with disabilities. *Scand. J. Occup. Ther.* 16, 78–87.
- Ahmad, J., Shakil-ur-Rehman, S., and Sibtain, F.(2013). Effectiveness of home modification on quality of life on wheel chair user paraplegic population. *Rawal Med. J.* 38, 263–265.
- Stark, S.(2004). Removing environmental barriers in the homes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improves occupational performance. *OTJR Occup. Particip. Health* 24, 32–39.
- Brunnstrom, G., and Sorensen, S., Alsterstad, K., and Sjöstrand, J.(2004). Quality of light and quality of life—The effect of lighting adaptation among people with low vision. *Ophthalmic Physiol. Opt.* 24, 274–280.
- Campbell, A.J., Robertson, M.C., Grow, S.J.L., Kerse, N.M., Gordon, F.S., Jacobs, R.J., Sharp, D.M., and Hale, L.A.(2005).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prevention of falls in people aged 75 with severe visual impairment: The VIP trial. *BMJ* 331, 817–820.
- Heywood, F.(2004). The health outcomes of housing adaptations. *Disabil. Soc.* 19, 129–143.
- Gitlin, L.N., Winter, L., Dennis, M.P., Corcoran, M., Schinfeld, S., Hauck, W.W.(2006). A randomized trial of a multicomponent home intervention to reduce functional difficulties in older adults. *J. Am. Geriatr. Soc.* 54, 809–816.
- Gitlin, L.N., Hauck, W.W., Dennis, M.P., Winter, L., Hodgson, N., and Schinfeld, S.(2009). Long-term effect on mortality of a home intervention that reduces functional difficulties in older adults: Results from a randomized trial. *J. Am.*



- Geriatr. Soc. 57, 476-481.
- Gitlin, L.N., Hauck, W.W., Winter, L., Dennis, M.P., and Schulz, R. (2006). Effect of an in-home occupational and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on reducing mortality in functionally vulnerable older people: Preliminary findings. *J. Am. Geriatr. Soc.* 54, 950-955.
- Tchalla, A.E., Lachal, F., Cardinaud, N., Saulnier, I., Bhalla, D., Roquejoffre, A., Rialle, V., Preux, P.M., Dantoine, T. (2012). Efficacy of simple home-based technologies combined with a monitoring assistive center in decreasing falls in a frail elderly population (results of the ESOPPE study). *Arch. Gerontol. Geriatr.* 55, 683-689.
- Stineman, M.G., Ross, R.N., Maislin, G., and Gray, D. (2007). Population-based study of home accessibility features and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Disabil. Rehabil.* 29, 1165-1175.
- Gitlin, L.N., Hodgson, N., Piersol, C.V., Hess, E., and Hauck, W.W. (2014). Correlates of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with dementia living at home: The role of home environment, caregiver, and patient-related characteristics. *Am. J. Geriatr. Psychiatry*, 22, 587-597.
- Allman, C. B., & Lewis, S. (2014). *ECC Essentials: Teaching the expanded core curriculum to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NY: AFB Press.
- Alwell, M., & Cobb, B. (2009). Functional life skills curricular interventions for youth with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32(2), 82-9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DSM-5)*.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ublishing.
- Bennett, K. D., & Dukes, C. (2014). A systematic review of teaching daily living skills to adolescents and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Review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 (1), 2-10.
- Bourdreault, C. G., Beaudoin, A. J., Galagher, F. and Couture, M. (2019). Scoping review of soci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ith profound intellectual

- disability in adulthood: What can I do once I finish school?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44(2), pp.248-260
- Chick, N., & Meleis, A. I.(1986). Transitions: A nursing concern. In P. L. Chinn (Éd.),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pp. 237-256). New York, USA: Aspen.
- Cronin, M. E., & Patton, J. R.(1993). *Life skills instruction for all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 practical guide for integrating real-life content into the curriculum*. Austin, TX: PRO-ED.
- Hall, S. A.(2009). The social inclusion of young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phenomenology of their experiences. *Journal of Ethnographic & Qualitative Research*, 4, 24-40.
- Heyman, M., Stokes J. E., & Siperstein, G. N.(2016). Not all jobs are the same: Predictors of job quality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44, 299-306.
- Kralik, D., Visentin, K., & van Loon, A.(2006). Transition: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5, 320-329.
- LaRue, R. H., Manente, C. J., Dashow, E., & Sloman, K. N.(2016). Functional skills . In N. N. Singh (Ed.), *Handbook of evidence-based practices i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pp. 229-239). Switzerland: Springer.
- Lemay, R.(2006). Social role valorization insights into the social integration conundrum. *Mental Retardation*, 44, 1-12.
- Matson, J. L., Rivet, T. T., Fodstad, J. C., Dempsey, T., & Boisjoli, J. A.(2009). Examination of adaptive behavior differences in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 1317-1325.
- Meininger, H. P.(2010). Connecting stories: A narrative approach of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4, 190-202.
- Merrells, J. Buchanan, A. and Waters R.(2019). "We feel left out": Experiences of social i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 adults with intellectual



-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44(1), pp.13-22.
- Merrells, J. Buchanan, A. and Waters, R.(2018). The experience of social inclusion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ithin community recreational program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43(4), pp.381-391.
- Schalock, R.(2004).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What we know and do not know.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8, 203-216.
- Schumacher, K. L., & Meleis, A. L.(1994). Transitions: A central concept in nursing. *Imag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6, 119-127.
- Siperstein, G. N., Heyman, M., & Stokes J. E.(2014). Pathways to employment: A national surve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41, 164-178.
- Wolfensberger, W.(1998). A brief introduction to social role valorization: A high-order concept for addressing the plight of societally devalued people, and for structuring human services(3rd ed., rev.).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Training Institute for Human Service Planning, Leadership and Change Agency.
- Wolfensberger, W.(2000). A brief overview of social role valorization. *Mental Retardation*, 38, 105-123.
- Wolf, S., Wolf, C. M., & Oakland, T.(2010). Adaptive behavior among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its relationship to community independence.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8(3), 209-215.
- Musterd, S. and Andersson, R.(2005). Housing mix, social mix, and social opportunities. *Urban Affairs Review*, 40(6), 761-790.
- Galster, G.(2007). Neighbourhood social mix as a goal of housing policy: A theoretic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7(1), 19-43.

부록 1. FGI 질문지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 연구」 서면 FGI 질문지

- 답변취합일 : 8월 13일(금)
- 회신메일 : syn376100@koddi.or.kr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상준 02-3433-4510
- 연구책임 : 서해정(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1

연구 배경

-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다른 지역주민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금까지 장애인의 ‘주거’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의 전 부였고, 지역사회에서의 가정과 같은 집 형태의 주거는 그리 고려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서울시의 지원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주택공사(SH)가 공급한 공적인 주택에 주거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모델이 제안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장애인 주거모델이 제공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차인의 독립을 돕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말함.



- 지자체 중 최초로 지원주택 모델을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화 추진 노력을 시작한 서울시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8년 5월 3일 공포함.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종류로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 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등 8가지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함.
- 2021년 현재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기반의 최저서비스기준이 아닌 지역사회 내 개인별 주택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를 가정하여 주거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대상자를 정하고, 이러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 이에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지자체마다 명칭 상이할 수 있음)을 운영하며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핵심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적절한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절차, 인력 기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함.
- 작성방법
 - 질문마다 개조식 또는 서술식, 자유롭게 작성. 분량 제한 없음.
 - 가능한 한 구체적인 평가와 제언을 요청드림.
 - 참고가능한 자료 혹은 기관 내 공개가능한 업무분장이나 직무(직무분석)자

료, 인수인계서 등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를 요청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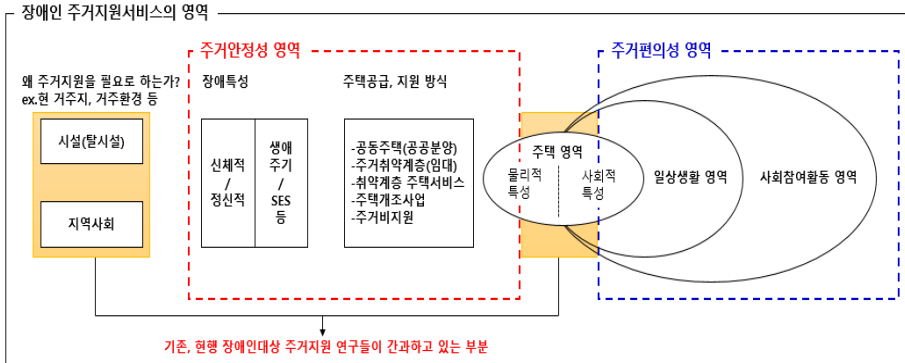
○ 추가사항

- 본 설문지를 작성 후 답변에 따라 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FGI가 실시될 수 있음.



2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



[그림 1]

- 주거지원 서비스는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이 적용됨. 국토연구원(2010)에서는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활용되는데, 이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2014)의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에서는 ‘주거안정성(주거복지와 유사)’과 ‘주거편의성(당사자의 삶의 측면을 강조하나 주거복지와 일부 중복)’으로 구분함.
- 일반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공급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말함.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의를 제시하고자 함.
 -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나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거지원서비스는 시설 퇴소에서부터 이사(입주)과정, 지역사회 내의 생활을 전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지원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의 활동지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범위까지 제시하고자

하며, 현재 다양한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위의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음.

-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한 후 하단의 1번 문항에 응답 요청



3

질문지

1.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면 <그림 1>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구진의 정의와 다르더라도 응답하여주십시오.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2. 현재 주거지원서비스(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제공 시에 부딪히는 어려운 순간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평가) (예시: 활동지원업무와의 차별점, 야간근무, 주택관리 등)

3. 주거지원서비스 영역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뒷면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래의 네모칸에 직접 작성하여 주셔도 되고, <붙임 1>에 빨간색 등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여 주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각 기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업무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매뉴얼 등에 들어갈 일반적인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

4. 주거지원서비스 영역과 활동지원서비스 간에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뒷면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차별점)

5. 주거지원서비스가 지니는 거주시설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지원서비스의 철학, 개념)

6.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설정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뒷면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거지원서비스 원칙)

7.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는 주로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발달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8.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대리신청 포함)하고,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과정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절차, 주체별 역할)

9. 이용자의 연고자 유무, 장애정도, 장애유형,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등 사회서비스 연계 정도, 기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배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뒷면 <붙임3>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

10. 인력의 적절한 양성, 관리, 처우 등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뒷면 <붙임3>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의 질, 자격, 자질)

11. 현행 장애인거주시설이 명칭 및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능전환)

12. 법정 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한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 주택(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자립홈 등 명칭 상이), 지원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원서비스 인프라는 향후 주거지원서비스 정립 과정에서 어떻게 안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의 방안)

1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지도 등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14. 이 외 지역사회의 주거지원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제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붙임1. 주거지원서비스 영역별 주요내용 예시

영역	하위영역	지원내용
입주 전 안내 및 연계	서비스 안내 및 홍보	-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이용자 초기 인터뷰	- 이용자에 대한 정보 파악(장애정보, 선호도 등) - 초기인터뷰를 통한 이용자의 욕구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 가능한 제도 및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연계 (장애인금, 보조기기 신청 등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가능한 정보 및 지역사회 내 연계 가 능한 서비스 연계)
	서비스 계약 및 변경	- 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 안내 - 이용계약서 작성 및 보관 - 서비스 변경 안내(기관/직원 변경) - 타 서비스제공 기관과의 연계(이용자 관련 서류 공유 등)
주거	주택이해	- 주택의 종류 및 유형 확인 - 주택 계약의 이해
	주거지 선택 및 계약	- 주거지 탐색 및 선택 - 부동산 활용 및 연계 - 동거여부 및 동거인 선택(단, 1인 주거가 원칙이 며, 동거예정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야함) - 주택 계약에 대한 지원
	이사	- 이삿짐센터 연계 - 전기, 가스, 수도, TV 등 개통 - 전입신고
	주거관리 및 유지	- 주거환경 개선 및 업체 탐색, 활용
일상생활	자기관리	- 개인위생 - 이미용관리
	가사관리	- 수납정리 - 의복관리 및 세탁 - 음식물 조리 및 관리 - 조리 및 주방용품 관리 - 청소 및 분리수거 - 가전제품 사용 및 관리 - 냉난방기 관리 및 사용

영역	하위영역	지원내용
	개인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시 점검(가스 및 전기 등) - 조리도구(식칼 등) 및 화기 관리 - 재난시 대처방안(소화기 사용 등) - 긴급상황시 신고처(경찰서, 소방서) - 응급의료상황 대처
	금전관리 (경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금 납부 - 생활비 등 금전관리 - 은행업무
	활동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및 계약 - 활동지원사를 활용한 일상생활 활동
사회참여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구입 및 비용 지불
	교통수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방문장소(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 사용 - 기차, 비행기, 시외버스 등 필요시 사용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탐색, 계획, 실행
	지역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활동 기관 이용 - 의사소통 및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 지역사회 내 주민들과 관계 형성
	취업 및 진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고민 및 탐색 - 취업관련 정보 확인 및 지원 - 평생교육기관 활용 - 직장생활
건강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재활 관련 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건강관리(복약 및 운동 등) - 건강검진 및 상담 - 재활관련 기관 연계 및 이용 - 현재 건강수준에 대한 파악 - 건강상태 표현 및 병원, 약국 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활용한 방문케어 연계(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과약물 정보수집 및 지원
옹호활동	선택 및 자기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의사에 의한 선택 및 책임 - 공공후견인 제도 탐색 및 연계 - 자기 의사 표현 - 타인과의 관계 - 자조모임 형성 및 활용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표현



영역	하위영역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AAC) 활용- 읽기 쉬운 자료 제작 및 제공- 의사소통 관련 기관 연계(읽기쉬운자료 제공기관, AAC 제공기관, 언어치료기관 등)
	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에 대한 이해(연애 및 성생활, 자위행위 등)- 피임방법 등 안내- 동의/거절/도움청하기- 피해를 받았을 때 방법 안내

※붙임2. 주거지원서비스 원칙 예시

1. 주거지원서비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 제공되는 서비스일 것.
2.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과 ‘종료’는 당사자와 그 가족, 공공후견인, 지자체 사례관리자, 탈시설지원센터 담당 직원에 의한 계약 또는 국가기관의 의뢰에 근거할 것.
3. 주거지원서비스의 ‘종료’는 위 2.에 의한 것이 아닌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을 것. (주거지원서비스 종료를 이유로 한 주택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4. 이용자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당할 위험 없이 본인이 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주거지를 이유로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가능성/종료가능성이 생겨나지 않을 것.
5. 주거지원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주택은 명의에 따라 명의자에게 속할 것. 단, 이용자 명의가 아닌 경우 지자체는 이용자에게 그만한 수준의 대체적인 독립 주거지를 제공할 것.
6.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은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
7.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직접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예산을 정부 지원을 통해 구축하고 있을 것.
8.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여부가 장애인 개인이 이용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기타 사회서비스의 제한이나 축소를 초래하지 않을 것.



※붙임3.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인력구성 및 인력기준

1. 인력구성

- 주택 입주자의 안정된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시 슈퍼바이저와 사례관리자, 동료지원가가 지원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입주자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계획, 수행, 점검해야 함.
- 주거유지지원서비스팀은 슈퍼바이저, 사례관리자, 동료지원가로 구성됨.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택 방문 시에는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슈퍼바이저	사례관리자	동료지원가
구성	- 사례관리자 4명 당 1명은 슈퍼바이저 자격을 갖춘 자이며, 슈퍼바이저 1인은 운영책임자 자격을 겸함 - 입주자 6명 당 사례관리자, 동료지원가 각 1명을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배치 (예시) 4명~6명일 경우 각1명, 7명~10명 각2명, 11명~14명 각3명		
비율	슈퍼바이저:사례관리자=1:4	사례관리자:입주자=1:6	동료지원가:입주자=1:4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취득 후 정신재활시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정신질환자이면서, 동료지원가 교육훈련 40시간 이상 수료자
처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보수 지급기준에서 4급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보수 지급기준에서 5급	서울시 생활임금수준 기준에 준함

※ 2019년 운영기준으로 서울시 사업운영 방향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록 2. 설문지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 연구 설문조사

이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정부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통합 정책에 따라 지역 사회 내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서비스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는 2012년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명시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기준이 전부입니다. 이에 장애인사업안내에 제시된 거주시설 최저 기준은 크게 핵심영역(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환경), 기본영역(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일반영역(서비스 안내 상담, 직원관리, 시설 운영)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은 기준 25에서부터 기준 31까지 명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들은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집단거주시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택을 기반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위한 기준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이에 대한 평가지표 또는 인증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연구에 참여할 응답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현장근무 종사자입니다. 참여자 중 주거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미만인 종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응답자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 중지시 귀하의 자료는 데이터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작성목적 이외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책임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전환지원팀 팀장
서해정 02-3433-0653

공동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연구원 이상준
02-3433-4510 / syn376100@koddi.or.kr

문의 및 상담을 위한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HQm2Wud>

* 오픈채팅방에서는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니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네(설문 진행)	아니요(설문 종료)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 본 내용은 통계적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기관명	설문지 작성자 명	기관 소재지

■ 주거관련 기관 근무경력

6개월 미만(설문종료)	
6개월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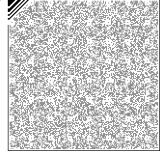


주거지원서비스 인식

-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를 가정하여 주거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차별화된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대상자를 정하고, 이러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체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인식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문항	1	2	3	4	5
주거지원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포용(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내 생활 유지를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 외에 별도 주거지원서비스 제도화가 필요하다					
주거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전혀 다른 배타적 서비스이다.(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장애유형 및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접근·이용 가능해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양은 장애유형 및 정도, 필요 수준, 해당 지역의 서비스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상향될 수 있어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주택 이용에 대한 권한(예: 입소 및 퇴소 조치의 권한)을 지녀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이용자)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선택권을 지녀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특정 형태의 시설(또는 주택유형)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안정된 주거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의 희망자에게 시설 혹은 가정 보호가 아닌 독립적인 주거지(1인 거주, 동로 동거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문항	1	2	3	4	5
주거지원서비스 희망자의 신청 접수, 선정, 제공기관 배치·변경 등에 관한 역할은 공적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역할 할 수 있다.					
주거지원서비스 전문인력의 배출을 위한 양성체계가 필요하다.					
주거지원서비스 전문인력의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혹은 그 이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 다음은 향후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예시(안)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여, 해당 영역 및 하위 영역이 적절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하위영역	지원내용
입주 전 안내 및 연계	서비스 안내 및 홍보 1-1	-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이용자 초기 인터뷰 1-2	- 이용자에 대한 정보 파악(장애정보, 선호도 등) - 초기인터뷰를 통한 이용자의 욕구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1-3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 가능한 제도 및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연계(장애인금, 보조기기 신청 등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가능한 정보 및 지역사회 내 연계 가능한 서비스 연계)
	서비스 계약 및 변경 1-4	- 주거지원서비스의 원칙 안내 - 이용계약서 작성 및 보관 - 서비스 변경 안내(기관/직원 변경) - 타 서비스제공 기관과의 연계(이용자 관련 서류 공유 등)
주거	주택이해 2-1	- 주택의 종류 및 유형 확인 - 주택 계약의 이해
	주거지 선택 및 계약 2-2	- 주거지 탐색 및 선택 - 부동산 활용 및 연계 - 동거여부 및 동거인 선택(단, 1인 주거가 원칙이며, 동거예정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야함) - 주택 계약에 대한 지원
	이사 2-3	- 이삿짐센터 연계 - 전기, 가스, 수도, TV 등 개통 - 전입신고
	주거관리 및 유지 2-4	- 주거환경 개선 및 업체 탐색, 활용 - 주거 시설물 관리
지역사회 생활	자기관리 3-1	- 개인위생 - 이미용관리
	가사관리 3-2	- 수납정리 - 의복관리 및 세탁 - 음식물 조리 및 관리

영역	하위영역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 및 주방용품 관리 - 청소 및 분리수거 - 가전제품 사용 및 관리 - 냉난방기 관리 및 사용
	개인안전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시 점검(가스 및 전기 등) - 조리도구(식칼 등) 및 화기 관리 - 재난시 대처방안(소화기 사용 등) - 긴급상황시 신고처(경찰서, 소방서) - 응급의료상황 대처
	금전관리 (경제관리)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금 및 임대료 납부 - 생활비 등 금전관리 - 은행업무(신탁업무)
	돌봄서비스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신청 및 계약 -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한 일상생활 활동
	보조기기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사용 및 관리, 수리법 안내
사회참여	쇼핑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구입 및 비용 지불
	교통수단 활용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방문장소(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 사용 - 기차, 비행기, 시외버스 등 필요시 사용
	여가활동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탐색, 계획, 실행
	지역사회활동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활동 기관 이용 - 의사소통 및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 지역사회 내 주민들과 관계 형성
	취업 및 진로, 교육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고민 및 탐색 - 취업관련 정보 확인 및 지원 - 평생교육기관 활용 - 직장생활
건강지원	건강관리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건강관리(복약 및 운동 등) - 건강검진 및 상담
	의료/재활 관련 기관 연계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관련 기관 연계 및 이용 - 현재 건강수준에 대한 파악 - 건강상태 표현 및 병원, 약국 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활용한 방문케어 연계(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과약물 정보수집 및 지



영역	하위영역	지원내용
		원
	응급의료지원 5-3	- 갑작스런 질병 및 건강이상으로 인한 응급상황 대응(입원 등)
옹호활동	선택 및 자기옹호 6-1	- 자기 의사에 의한 선택 및 책임 - 공공후견인 제도 탐색 및 연계 - 자기 의사 표현 - 타인과의 관계 - 자조모임 형성 및 활용 - 장애인 차별 이해 및 대처법 - 사기예방, 피해 대처(보이스 피싱, 결제사기 등)
	의사소통 6-2	- 의사소통 표현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AAC) 활용 - 읽기 쉬운 자료 제작 및 제공 - 의사소통 관련 기관 연계(읽기쉬운자료 제공기관, AAC 제공기관, 언어치료기관 등)
	성생활 6-3	- 성에 대한 이해(연애 및 성생활, 자위행위 등) - 피임방법 등 안내 - 동의/거절/도움청하기 - 피해를 받았을 때 방법 안내
인식개선	지역사회 장애인인식개선 7-1	- 지역사회 내 주만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기타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위 항목 외에 각종 서비스 지원	

* 1: 매우 부적절하다 / 2: 부적절하다 / 3: 보통이다 4: 적절하다 5: 매우 적절하다

구분	문항	1	2	3	4	5
영역 1	입주 전 안내 및 연계					
1-1	서비스 안내 및 홍보					
1-2	이용자 초기 인터뷰					
1-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1-4	서비스 계약 및 변경					

구분	문항	1	2	3	4	5
영역 2	주거					
2-1	주택이해					
2-2	주거지 선택 및 계약					
2-3	이사					
2-4	주택관리 및 유지					
영역 3	지역사회 생활					
3-1	자기관리					
3-2	가사관리					
3-3	개인안전					
3-4	금전관리/경제관리					
3-5	돌봄서비스					
3-6	보조기기					
영역 4	사회참여					
4-1	쇼핑					
4-2	교통수단 활용					
4-3	여기활동					
4-4	지역사회 활동					
4-5	취업 및 진로, 교육					
영역 5	건강지원					
5-1	건강관리					
5-2	의료/재활기관 연계					
5-3	응급의료 지원					
영역 6	옹호활동					
6-1	선택 및 자기옹호					
6-2	의사소통					
6-3	성생활					
영역 7	인식개선					
7-1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영역 8	기타 서비스 지원					

답례품 제공을 위한 연락처 수집

- 답례품 제공을 위해 연락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 연구

발 행 일 : 2021년 10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리드릭 02-2269-1919

ISBN 978-89-6921-417-1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